

안원구 “도곡동 땅 주인은 이명박이라는 전표 봤다”

한상률 게이트의 진실을 알고 싶다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국세청 고위 공무원 안원구가 전 국세청장 한상률 등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이명박 정권의 치부가 양파 껍질 벗겨지듯 계속 드러나고 있다. 안원구의 폭로에는 여러 명의 ‘정권 실세’가 등장해 이 사회 권력자들이 얼마나 부패했고 비리의 사슬을 통해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배자들의 추악한 권력 다툼과 배신, 그리고 그 사이에 오가는 로비와 뇌물은 정말 “삼류 정치소설에서나 볼 수 있을직한 일들”(민주당 박주선)이다.

대구 국세청장이던 2007년 말 포스코 정기 세무조사에서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는 전표를 발견하면서 안원구의 비극은 시작된다. 이어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국세청에서는 온갖 복마전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노무현 때 임명된 한상률은 이명박 당선 뒤에도 국세청장 자리를 지키려고 로비를 했다. 한상률은 정권 실세에게 10억 원을 쥐여준다며 안원구에게도 3억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아울러 국세청 차장 자리를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정통 TK 출신 관료인 안원구는 TK 인맥을 통해 ‘형님’ 이상득과 접촉했다. ‘만사형통’의 힘 덕분에 한상률은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10억 원은 마련됐을까? 그랬다면 누구에게 간 것일까?

서막

한상률은 그 후 이명박에게 충성을 다했다. 안원구 측근에 따르면 한상률은 안원구에게 “당신이나 나나 지난 정부 사람이라고 이 정부에서 굶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 이때 우리가 이 정권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노무현 후원인 박연차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해서 이명박에게 독대 보고를 했다고 한다. 노무현의 자살은 이런 기획수사의 결과였을 것이다.

한상률의 로비는 계속됐다. 4대 권력 기관장 교체설이 나돌던 지난해 크리스마스, 한상률은 이상득 측근과 골프를 치고 이명박 동서와 만찬을 즐겼다. 그러나 한상률이 전임 국세청장 전근표에게 5천만 원에 이르는 그림을 뇌물로 바쳤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한상률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상률은 뇌물 제공으로 처벌받기는커녕 느닷없이 5년 동안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다. 그러나 한상률이 이 정권의 ‘진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에 ‘유학을 간 게 아니라 보내진 것’이라는 ‘기획출국설’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도곡동 땅의 ‘진실’을 알고 있는 안원구도 “청와대 최고위층을 포함한 정부 전체의 판단”이라며 지속적으로 사퇴를 종용당했다. 이 모든 게 ‘도곡동 땅 들여다본 죄’ 때문이었다.



세계일보의 1993년 3월 27일자 보도 이런 진실을 누가 한사코 막으려 하는가

‘11시간 감금’을 당하는 등 신변의 위협까지 느껴 온 안원구는 TK 선배인 특임장관 주호영에게 편지를 써 구명도 시도했다. 안원구는 “VIP[이명박]와 관련된 ‘도곡동 땅’에 대한 내용의 문건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 철저한 보안유지를 지시[해서, 결국] ... VIP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런 ‘불편한 진실’들에 대한 냄새를 맡은 《월간조선》이 국세청 관련 기사를 10월호에 내려 하자 국세청이 ‘기사 무마 로비’로 기사화를 막았다. 11월호에 다시 기사화하려 하자 이제는 국가정보원과 청와대까지 나서 전방위로 막아섰다(《미디어오늘》).

나아가 검찰은 입을 열기 시작한 안원

구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구속된 안원구가 필사의 폭로전에 나서며 진실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개된 내용은 서막에 불과”(《한겨레21》)하다고 한다.

《신동아》 인터뷰와 민주당 의원과의 만남 직전에 안원구가 긴급체포되고 곧바로 접견금지된 사실만으로도 정권이 매우 다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국무총리실 차장이 긴급히 미국으로 건너가 한상률에게 모든 의혹을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안원구 파일에는 한상률이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기업체 정보가 대거 포함되어 있고 정·관계 고위인사들이 주고받은 2백억 원대의 미술품 로비 실태가 적나

라하게 담겨 있다는 얘기도 있다(《경향신문》). 민주당 박지원은 박연차 여비서의 다이어리에 태광에서 MB쪽으로 간 자금 리스트가 담겨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이 사회 권력자들이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혀서 얼마나 추악한 아귀다툼을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모든 진실이 모조리 밝혀져야 한다. 한상률은 당장 한국으로 범죤인 인도돼야 하고 이상득을 비롯한 모든 책임자들은 당장 사퇴·처벌돼야 한다.

이것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명박을 비롯해 이 사회 핵심 권력자들이 엮여 있는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수많은 걸림돌이 있다. 당장 BBK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사가 이번 사건 담당 검사이기도 하다.

이명박이 그토록 공을 들인 ‘언론 장악’이 힘을 발휘하는지 주요 방송과 신문들은 이 사건을 제대로 보도하지도 않고 있다.

이명박뿐 아니라 부패 사슬의 일부인 자들 모두가 “그게 터지면 그때는 다 끝장난다 이거지”(안원구의 녹취록)라는 심정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모든 의혹과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강력한 반부패 투쟁이 필요한 때다.

박건희 기자 | pkh@left21.com

두바이 위기, 모래 위에 세운 자본주의를 보여 준다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급 불능(디폴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토호국 중 하나인 두바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막의 뉴욕’, ‘중동의 진주’로 알려진 경제 번영의 정점(頂點)이었다.

중동의 ‘금융 허브’를 지향하며 금융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법인세를 폐지해 중동의 오일 머니와 미국·유럽 등의 자금을 끌어 들였다. 그리고 야자 잎 모양의 초대형 인공섬 리조트 ‘팜아일랜드’

드’, 세계 최고층 건물 ‘버즈두바이’, 사막에 들어선 실내 스키장 등 대규모 건설 사업을 벌여 3천억 달러가량을 투자했다.

국가 부도

그러나 이번 미국발 경제 위기로 부동산값이 폭락하고 신용이 경색되면서 지난해부터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엄청난 빚을 계속 지면서 건설 사업을 벌이던 것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두바이는 이미 올해 2월에 아부다비로부터 1백억 달러를 지원받아 부도 위기를 넘긴 바 있다. 구제금융으로 약 9개월을 버티다가 2차 부도 위기가 터진 것이다.

이번 두바이 충격이 즉각적인 연쇄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뱅크 오브아메리카는 “두바이 사태로 선진국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신흥시장에 유입되는 투자자금도 축소돼 국가 부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3면으로 이어짐

세상을 이끄는

“사람이 간사해서 생각이 바뀐다더라”

간사한 정운찬

“홍수가 와서 로봇 물고기가 떠내려가면 어떡하나?”
“3천만 원 가까이 한데에 낚시꾼이 집어 가면 어쩔 것인가?”

한나라당 의원 차명진도
어처구니없어 하는
이명박의 로봇 물고기

“며칠 전 김홍일 중수부장을 만났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다. ‘도곡동 땅 소유주인’ 제3자가 누굽니까. 검찰은 알고 있죠?’ 김 중수부장이 답했다. ‘그때 일은… 하 나도 기억 안 납니다.’ 내가 웃었다. 그도 소리 내어 웃었다”

〈경향신문〉논설위원 백래웅,
모두가 알지만 말하지 않는 진실

“나는 KBS를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왔다”

KBS 사장 김인규, 낙하산 타고?

“제5공화국 출범 1년은 그 이전의 어지러움과 어두움과는 반대의 안정과 밝음으로 완전히 바뀌어… 온 국민의 단합과 자신의 용기와 지도자의 영도력이 혼연일체를 이룬 데서 발휘될 수 있었다”

1982년에 김인규,
혹시 조선중앙TV 기자?

“‘대통령의 사람’이 KBS 사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6년 전 〈조선일보〉

“어떡하든 친일파를 한 명이라도 더 만들겠다고 혈안이 된 이들[민족문제연구소]의 ‘섬뜩한 열굴’ … 이들과 대결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정신과 휴머니즘은 설 자리를 잃을지 모른다”

〈조선일보〉선임기자 최보식

“[미국 대통령을 볼 수 있는] 이 순간을 태어나 약 38년 동안 기다려 왔다”

미국단체협의회 오바마
환경 집회에서 개그맨 심현섭

이명박의 4대강 거짓말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사업

사진: 제3공 민중의 소리

삼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이명박은 지난 11월 27일 총 35개에 이르는 방송에 나와 채널선택권도 빼앗고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말이 좋아 대화지 국민을 상대로 백 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는 자리였다. 특히 4대강 사업 관련한 거짓말은 “혹세무민”(온화반대전국교수모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은 시화호의 수질이 개선됐으며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1996년에 이미 시화호는 방조제 때문에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폐죽음을 당할 정도로 수질이 악화됐다. 2년 후 수질 회복을 위해 해수 유통을 실시하자 이제는 썩은 물이 인근 바다로 흘러가 어패류가 폐죽음을 당하고 기형 물고기가 발생하는 환경 재앙이 발생했다. 아무리 이명박이 막나간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죽음의 땅’을 뻔뻔스럽게 수질 개선 사례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지난 6월 라디오 연설에서는 “완전히 죽었던 태화강을 준설해 물을 풍부히 했더니 이제는 울산의 보물이 됐다”고 하기도 했다. 하지만 태화강은 오히려 보를 견어내 수질이 개선된 사례로, 거짓말이 틀뚱나자 이제는 시화호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명박은 잡설과 신곡수중보로 가워진 한강의 수질이 깨끗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바닥은 썩어 악취를 내고 있고 물은 4~5급수(생명의강연구단)다. 고작 3~4미터 높이인 이 두 수중보에서 이런 오염이 발생했다면, 4대강 지역에 계획된 8~9미터짜리 수중보는 말해 무엇하겠는가.

물을 가두면 썩는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명박은 한국이 세계 최고의 수질 개선 기술이 있어서 괜찮다고 한다. 그러나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 시절에 만든 간원호와 부남호의 수질은 너무 썩어 등급조차 매길 수 없는 ‘등급외’거나 최하 등급인 5등급이다. 이 호수들은 오염으로 인한 녹조현상이 너무 심해 마치 녹색 페인트를 물에 풀어놓은 듯하다.

이명박은 또 “옛날 맑은 물 흐르고, 뗏목 타던 시절로 돌아가자”고 했다. 그러나 뗏

목은 지금도 탈 수 있다. 하천 수심을 6미터 이상으로 파는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누가 봐도 뗏목을 타려는 게 아니라 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은 “[운하를] 하려면 다이나 다다음 정권이 할 거”라며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과 매끄럽게 연결됨을 실토했다. 실제 국토관리청이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체에 제공한 ‘다가능 보’ 도면에는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갑문이 명확히 표시돼 있었다.

대운하로 이어질 4대강 사업

홍수 피해 복구에 매년 4~5조 원씩 들어 4대강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어처구니없다. 국토부와 환경부의 환경 예산은 다 합쳐도 2조 원 안팎인데다, 올해 여름만해도 하천 피해액 9백11억 원 중 4대강 수해 피해액은 전체의 0.5퍼센트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홍수 피해는 4대강 사업 구간이 아닌 지류

와 지천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명박이 말한 수질 오염을 감시하는 물고기 로봇도 황당하기 짝이 없다. 물고기 로봇은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깊은 바다에서 활용하려는 것이지, 일상적으로 수질을 감시할 수 있는 강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특정 지역에 수질측정장치를 고정해서 일관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유용하다. 더구나 아직 수족관 바깥에서 검증된 적도 없고 가격도 3천5백만 원에 이르는 물고기 로봇을 강에 풀어놓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무리 이명박이 우격다짐식으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여도 여전히 70퍼센트 가까운 국민들이 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삼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압도적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4대강 삼집은 이명박의 정치적 무덤을 파는 삼집이 될 것이다.

박건희 기자 | pkh@left21.com

이명박은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도 없다

이명박은 G20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이야말로 법과 질서를 밥 먹듯이 어긴 장본인으로 부정 부패는 이명박의 때려야 뗄 수 없는 키워드다.

이명박은 선거법 위반 외에 도시계획법 위반,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고발된 사건만 10여 차례가 넘는 화려한 전력을 갖고 있다.

위장전입, 자녀 위장 취업, 탈세, 건강보험료 체납 등 ‘자질구레’한 것은 제외하고 말이다.

대선 때는 도곡동 땅부터 시작해 BBK, 천호동 개발 특혜, AIG 특혜, 상암동 DMC 특혜 등 셀 수 없는 비리 의혹으로 박근혜마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했다. 당시 우파들조차 비리 문제로 인한 이명박의 ‘유고’ 가능성을 걱정할 정도로 이명박에게서는 부패의 악취가 진동했다.

윗물이 이렇게 썩었으니 아랫물이 썩은 것은 당연하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의 처사촌 김옥희가 30억여 원을 받고 공천 장사를 한 ‘언니 게이트’부터 최근 사돈 기업 효성의 ‘효성 게이트’까지 굵직굵직한 비리가 있었다.

전 청와대 비서관 추부길은 박연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왕의 친구’ 천신일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와대 행정관은 성접대를 받았다.

최근에는 ‘제2의 차떼기’라는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게이트도 터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크게 두드려 도곡동 땅을 가리려는 듯하다. 비리로 비리를 덮는 꾀이다.

부정부패 문제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원조 부패정당인 한나라당 정권 하에서 부패 문제는 더 빈번하게, 더 큰 규모로 터질 가능성이 크다.

그로 인한 대중의 분노 역시 커질 것이다.

따라서 부정부패한 권력자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그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진보진영의 중요한 과제임을 잊어선 안 된다.

박건희 기자 | pkh@left21.com

부자 감세·서민 증세·복지 삭감, “MB 거꾸로 예산을 뒤집어야”

이명박은 11월 28일 공기업선진화 워크숍에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서민경제가 팍팍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예산을 29퍼센트나 증액했다. 감사도 받지 않는 특수활동비 등은 46억 원이나 증액했다. 청와대 관람객 기념품 예산은 지난해부터 해마다 2억 원씩 증액되고 있다.

대통령의 특별 지명 업무를 수행하는 특임장관 역시 특수활동비 등 불투명 예산을 23억 원이나 편성했다. 대부분 밥값·술값으로 쓰는 돈이다.

대통령 직속 기관들만 이렇게 방만한 게 아니다. 법무부는 ‘법질서 바로세우기’ 사업에 33억 원이나 쓴다. 4대강조차 불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고 효성 비리, 국세청 비리 등의 검찰 수사는 유야무야되고 있는데 말이다.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 무료화는 몇 년째 시행을 미루면서 대기업 병원들의 돈벌이를 위한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예산은 1백8억 원이나 증액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심의에서 15억 원 삭감됐지만 이명박 정부의 예산 우선순위를 명백히 보여 준다.

국방 예산은 소리 없이 늘었다. 국방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군인연금 등을 복지예산 항목에 넣어 놓았으니 국방예산은 알려

진 6천억 원보다 더 늘었다고 봐야 한다. 사이버방호사령부는 관련 법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30억 원을 책정해 놓았다.

난데없는 ‘우측 보행’ 캠페인도 예산을 잡아먹고 있다.

이런 파렴치한 예산안을 두고 한나라당은 동네 골목마다 “사상최대 복지예산”이라며 현수막을 걸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 기념품

12월 1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정책위 의장들과 환경단체 대표들은 간담회를 열고 4대강 예산 삭감에 합의했다. 물론 온도차는 있다. 진보 정당들이 사업 자체를 폐기하는 삭감을 얘기

한 반면, 민주당은 “불필요한 예산 삭감” 방침이고 창조한국당은 “삭감은 동의하나 예산안은 빨리 처리”하자고 한다. 진보 정당과 환경단체 등이 국회 안 야당 공조에만 의존 말고 대중적 저항을 건설해야 하는 이유다.

4대강 사업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국토해양위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수자원공사에 8조 원을 떠넘겼는데 이는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일에는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낙동강 공구 예산 과다 책정 사실을 폭로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결국 국회는 법정 예산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겼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예 시작도 못했다. 법정 시한 전에 예결위가 시작조차 못한

것은 19년 만이다.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로 수입이 줄자 예산 규모를 축소한 뒤 건설 대기업만 이로운 4대강 사업에 수십조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그 대가로 서민 증세와 복지 삭감이 일어났다. 지금 서민들에게는 예산안 심의가 늦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안 자체가 문제다.

그러나 소수와 진보 야당들이 국회 예산 심의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시간 끌기뿐이기에 국회 바깥에서 저항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11월 26일 민생예산 범국민대회는 좋은 시작이다. 이날 대회의 구호대로 “거꾸로 가는 MB 예산, 국민이 뒤집”어야 한다.

김문성 기자 | enlucha@left21.com

거품이 터지면서 ‘두바이 드림’도 끝났다

▶ 1면에서 이어짐

두바이의 채무불이행은 크게 세 가지로 세계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우선, 중동에서 가장 많은 채권을 발행한 두바이의 채무불이행으로 중동 금융 시장이 경색될 것이고, 동유럽, 아일랜드, 그리스, 남아공처럼 부도 위기에 빠진 국가들의 위험도를 더욱 높였다.

둘째, 두바이에 자금을 지원한 서유럽 은행들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국제결제은행 자료를 보면, UAE의 1천2백30억 달러어치 외채 중 바클레이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BNP파리바, ING그룹, HSBC 등 서유럽 금융기관들이 약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우리 나라 증시에 투자한 외국계 자금 중 유럽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33퍼센트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미국도 두바이 충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미국 금융기관들의 직접 대출은 적지만, 유럽 금융기관들이 두바이에 대출을 해 주면서 미국 금융기관들에서 신용 보증을 구입했을 수 있다. 두바이의 채무불이행을 미국 금융기관들이 보상해야 하는 것이다.

또, 두바이월드는 미국 각지에서 호화 리조트, 호텔, 휴양지 등에 투자를 했는데, 빚을 갚기 위해 이를 헐값에 매각할 경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가뜰이나 부실해져 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으로 언급되고 있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

두바이의 모라토리엄이 세계경제에 어떤 경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아부다비가 얼마만 한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두바이를 지원하느냐로 위기의 폭과 심도도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세계 도처에 얼마나 많은 금융 부실 폭탄이 깔려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발전 모델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도 보여 줬다.

두바이의 채무불이행은 크게 3가지로 세계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우선, 중동에서 가장 많은 채권을 발행한 두바이의 채무불이행으로 중동 금융 시장이 경색될 것이고, 동유럽, 아일랜드, 그리스, 남아공처럼 부도 위기에 빠



초대형 인공섬 리조트 ‘팜아일랜드’ 엄청난 빚에 의지한 ‘삼철’은 결국 무너졌다.

진 국가들의 위험도를 더욱 높였다.

둘째, 두바이에 자금을 지원한 서유럽 은행들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국제결제은행 자료를 보면, UAE의 1천2백30억 달러어치 외채 중 바클레이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BNP파리바, ING그룹, HSBC 등 서유럽 금융기관들이 약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우리 나라 증시에 투자한 외국계 자금 중 유럽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33퍼센트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미국도 두바이 충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미국 금융기관들의 직접 대출은 적지만, 유럽 금융기관들이 두바이에 대출을 해 주면서 미국 금융기관들에서 신용 보증을 구입했을 수 있다. 두바이의 채무불이행을 미국 금융기관들이 보상해야 하는 것이다.

또, 두바이월드는 미국 각지에서 호화 리조트, 호텔, 휴양지 등에 투자를 했는데, 빚을 갚기 위해 이를 헐값에 매각할 경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하락

을 부추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가뜰이나 부실해져 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으로 언급되고 있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

두바이의 모라토리엄이 세계경제에

어떤 경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아부다비가 얼마만한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두바이를 지원하느냐로 위기의 폭과 심도도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세계 도처에 얼

마나 많은 금융 부실 폭탄이 깔려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발전 모델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도 보여 줬다.

강동훈 기자 | kdh@left21.com

두바이 몰락의 길을 고스란히 따라하는 MB 정부

이명박은 대통령 후보 때부터 두바이를 방문하고 “새만금을 한국의 두바이로 개발하겠다”며 앞장서 ‘두바이 따라하기’를 독려했다.

HSBC 임원 출신이자 두바이국제금융센터지구 회장인 데이비드 엘든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공동위원장으로 전격 발탁하기도 했다.

데이비드 엘든은 “한국이 두바이 같은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 중북부터 풀고 금융 서비스의 완전한 개방을 꾀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신자유주

의 정책을 집중 설파했다.

지자체 단체장과 정치인, 기업인이 무슨 성지순례하듯 두바이를 다녀왔고, 보수 언론들은 특집기사와 사설 등을 통해 두바이처럼 법인세 폐지, 금융시장 개방과 노동유연화를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물론 지금은 모두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도 없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쥐어짜고, 부채에 의존해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이고, 외국 자본의 자유로운 돈벌이를 허용하는 두바

이 모델의 파산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파산을 분명히 보여 줬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와 한국의 지배자들은 반성하기는커녕 4대강 삼철을 포함한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일 뿐 아니라 부자 감세, 금융시장 개방, 공기업 선진화, 노동조합 탄압 등 두바이가 몰락한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런 어리석은 질주를 막고 경제 위기에서 대중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부자 증세, 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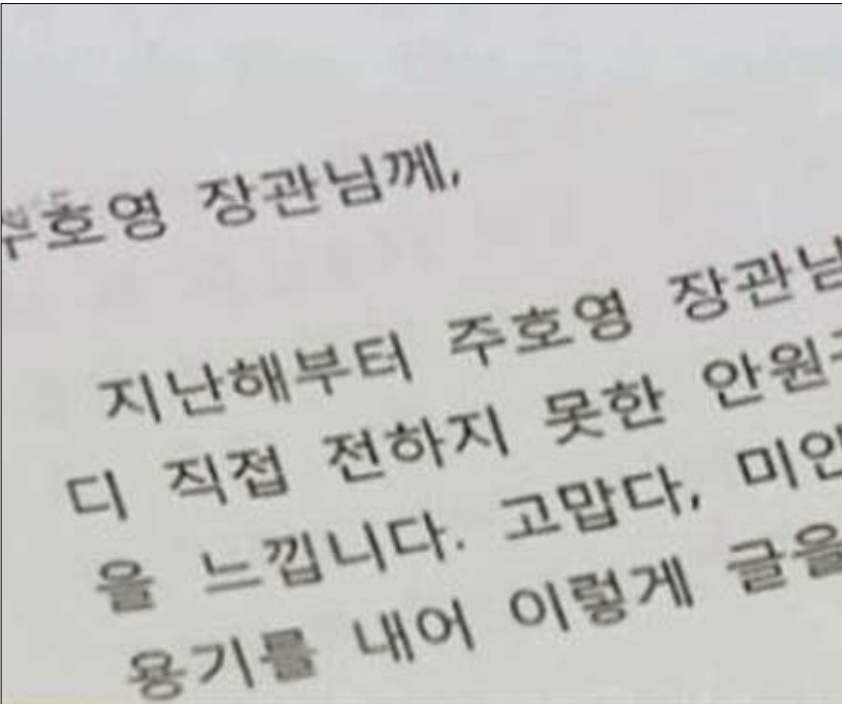
강동훈 기자 | kdh@left21.com

MB 도덕성 논란의 ‘핵’ 도곡동 땅

도곡동 땅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도덕성 논란의 ‘핵’이었다.

1985년 이명박의 큰형 이상은과 처남 김재정은 공동 명의로 현대건설로부터 1천 평이 넘는 도곡동의 급싸라기 땅을 15여억 원에 헐값 구입했다. 당시 현대건설 사장은 이명박이었고 강남 개발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는 의혹이 있었다. 그러다 1994년 포스코에 2백63억 원에 팔아 2백47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이익을 남겼다.

이미 1993년에 <세계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이 이명박의 도곡동 땅 차명 소유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민자당은 소속 의원의 재산을 공개했는데, 이명박은 이 당시 자신이 소유하던 서초구 땅(당시 1백84억 원 상당)도 신고를 누락해 당에서 경고를 받았다. 이때부터 도곡동 땅은 이명박을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낙인찍은 ‘원죄’ 같은 것이었다.



토사구팽의 비애 안원구는 특임장관 주호영에게 편지를 써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상임고문이었던 서청원은 “김만제 전 포항제철 회장이 ‘이명박 후보가 국회의원 때인 1993~94년쯤 세 번이나 찾아와 [도곡동 땅]에 내 땅인데 포철이 사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만제는 이미 1998년 포항제철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도곡동 땅의 실질 소유자가 이명박 씨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2007년 8월, “도곡동 땅의 지분은 이[상]은 씨가 아닌 제3자의 차명 재산으로 보인다”면서도 “그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는 모른다”는 선문답 같은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

그러나 이명박의 당선이 확실시되던 12월에는 “이[명박] 후보의 소유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BBK 특검은 한술 더 떠 “이상

은 씨 소유”라고 결론지었다.

도곡동 땅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대선 당시 이명박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BBK 사건과 연결된다. BBK 사건은 주가조작으로 5천여 명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6백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사기극이다.

문제의 도곡동 땅 매각 대금 가운데 22억 원은 다스에 투자됐고, 다스는 다시 1백90억 원을 BBK에 투자한다. BBK와 이상은·김재정이 대주주인 다스는 모두 진짜 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다스가 BBK에 투자한 1백90억 원은 도곡동 땅 매각 대금 가운데 일부라는 의혹도 있다.

이명박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땅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안원구는 이런 도곡동 땅의 ‘진실’을 엿본 죄로 사퇴 종용을 당하다가 이제는 긴급체포된 것이다.

박건희 기자 | pkh@left21.com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투쟁

노동자의 등에 칼을 꽂은 한국노총 지도부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부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도에 맞서 민주노총과 공동 투쟁을 약속했던 한국노총 지도부가 배신했다. 사실 한국노총 지도부의 ‘뒤통수 때리기’는 과거 역사에서도 거듭 반복돼 온 일이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11월 30일 ‘정부가 복수노조 금지만 해 주면 전임자 임금은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선언을 하고 12월 총파업을 선언해야 할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정부에 항복 선언을 한 셈이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기업 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조 사이에 강성 투쟁 경쟁을 불가피하게 하고 더 투쟁적인 노조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정부와 경영계 논리를 내세우며 복수노조 금지를 강조했다. 한국노총의 관료들은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더 투쟁적이고 민주적인 노조로 조합원들이 옮겨가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질까 봐 노심조사해 온 것이다.

기득권

한국노총 지도부의 ‘배신’은 지난 양대 노총의 노동자대회에 참가했던 15만 조합원들의 등에 칼을 꽂고, 이명박 정부에 맞서 선두에서 파업을 벌이는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배신 행위다. 한국노총 지도부가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한나라당과의 교감이 있었



11월 7일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에 참가한 15만 조합원 - 한국노총 지도부는 이들의 뒤통수를 쳤다.

사진 이미지

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0월 재보궐 선거의 패배 여파, 최근 이명박과 관련된 부패 추문(한상환 게이트), 세종시 문제, 4대강 사업 강행 등으로 대중적 반발에 직면하고 정치적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한국노총 지도부를 버리고 노동계와 정면 대결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특히 철도 파

업과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선 저항이 이어지고 있고 양대 노총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에서 노동계를 분열시켜 분리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한국노총 지도부도 내년 지자체 선거에 지도부 상당수가 출마를 노리고 있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할 마음

도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양대노총 총파업이 실제로 펼쳐졌을 때 투쟁이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작용했을 듯하다. 철저히 상층 관료의 이해관계에만 몰두해,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80퍼센트가 넘게 찬성해 준 조합원들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다. 현재 “한국노총의 제안을 정부와 한나

김영재 다함께 노동조합팀

공무원노조 라일하 사무처장

“정권 탄압에도 힘있게 투쟁하는 노조가 될 것”

‘타협은 없다’는 이명박의 말 한마디에 경찰 2백여 명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를 제출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날 새벽이었다.

이명박의 도국동 땅 문제를 감추기 급급한 정부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위법’, ‘불법’ 운운하는 것은 위선이다. 당선되자마자 정부 탄압의 못매를 맞고 있지만, 12월 12일 민주노총과 함께 노조 탄압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힘있게 준비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라일하 사무처장**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라일하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가 당선 축하 선물로 “해임”을 안겨 준 양성운 위원장과 함께 공무원노조를 이끌고 있다.



공무원노조 라일하

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타의에 의해서 법의 활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큰 단결력으로 장의에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활동 방향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입장에서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는 법의 활동을 하더라도 충분히 더 강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부 정책 반대를 못하게 법제화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런 정책에 대한 반대 능력을 더 강화하고 지속해야 합니다.

부패 척결은 공무원노조가 출범하면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선연적인 부패 척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직사회 안에서 부패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접근해 사전에 차단할 것입니다. 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는 고위공무원들이 현세를 낭비하는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노조가 철저하게 감시하고 폭로해서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현장의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가입에서 보여 준 것처럼 사회적 의식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공무원 노동자가 민중의 입장에서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을 때 동조하는 조합원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천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단결

4대강 문제, 세종시 문제는 국민 절반 이상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정책변경을 요구하는 것인데, 몇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입맛에 맞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에 반대하면 말살하려는 것이 이 정권의 실체입니다.

정부의 노조 탄압은 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진보진영이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면, 단결해야 합니다.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공무원노조 통합이 좋은 사례입니다. 자본들이 뭉치듯 우리도 더 크게 뭉쳐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빠르게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노조가 그동안 올곧게 설 수 있도록 주변에서 지지와 격려를 주었고, 이것이 힘이 돼서 정권 탄압에도 힘있게 투쟁하는 노조로 건설됐습니다. 앞으로 더 할 일이 많은데 진보진영의 동지들이 이 위기 속에서 공무원노조를 지지하고 엄호해서 이 정권과 투쟁할 수 있는 더 건강한 노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 바랍니다.

인터뷰·정리 박천석 공무원노조 활동가

KBS 낙하산 사장 김인규

‘땡전’ 뉴스 기자에서 ‘땡박’ 방송 사장으로

이명박은 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의 방송 특보를 지낸 김인규를 KBS 사장으로 임명했다. KBS 기자회견 블로그 ‘싸우는 기자들’에 올라온 김인규의 기자 시절 보도 내용을 보면, 그가 어떻게 MB 특보를 거쳐 KBS 사장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는지 알 만하다.

김인규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인 1987년 1월 15일 민정당 창당 기념식을 보도하며 “민정당은 창당 때부터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 청렴 정치에 앞장서 왔습니다”하고 추켜세웠다. 전두환의 호헌 선언을 “유일한 길”이라며 떠받들었고 노태우의 대선후보 선출은 “민주정치 발전의 결정적 전기”라며 시종일관 학살자·독재자들을 찬양했다.

1987년 당시 수많은 노동자·학생들이 언론사 유리창에 돌을 집어 던진 것은 바로 이런 자들 때문이었다.

정권의 언론 통제가 강하던 시절이기는 해도 “정도의 차이”라는 게 있다. 1979년 정치부에 입문한 김인규는 전두환과 5공화국을 등에 업고 성장한 전형적인 정치엘리트 기자다. 지속적으로 정권에 부역하면서 ‘정치부 차장, 정치부 부장, 미국특파원’으로 이어지는 화려한 이력을 얻어 냈다.

한 네티즌의 지적처럼 김인규는 독재의 후예들에게 아부하며 “20년 동안 한 우물을 판” 결과 지금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이다. 이런 자가 방송사의 통제권을 갖게 되면 얼마나 친재벌·반노동·반민주적 보도를 할지는 안 봐도 뻔하다.

이런 사이비 언론인을 사장으로 인



낙하산은 불시착해야 한다.

정할 수 없다는 KBS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한 투쟁일 뿐 아니라 1987년 이래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 온 노동자 투쟁의 소중한 일부다.

2일 KBS 노동자들의 총파업 찬반투표는 아쉽게 부결됐다. 투표자의 57퍼센트가 찬성했으나 재직 인원 과반수에 약 2퍼센트(77명) 모자랐다. 현행 법은 불합리하게 파업 가결 요건으로 투표 인원이 아니라 재직 인원의 과반수를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KBS 노조 지도부가 김인규의 출근을 막지 못한데다 이미 업무를 시작한 후 파업 투표에 들어간 것이 아쉬운 결과에 영향을 끼친 듯하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다.

YTN 노동자들의 단호하고 끈질긴 투쟁은 낙하산 사장에 맞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갈 길을 보여 줬다. 만약 KBS노조 지도부가 계속해서 시간을 끌며 투쟁을 회피한다면 사원행동, PD 협회, 기자회견 등 기층 조직들이 주도력을 발휘해 실질적인 투쟁을 조직하고 김인규를 저지해야 한다.

장호중 기자 | rednuc@left21.com

서울대 최갑수 교수 인터뷰

“서울대 법인화는 대학의 기업화, 대학들간 양극화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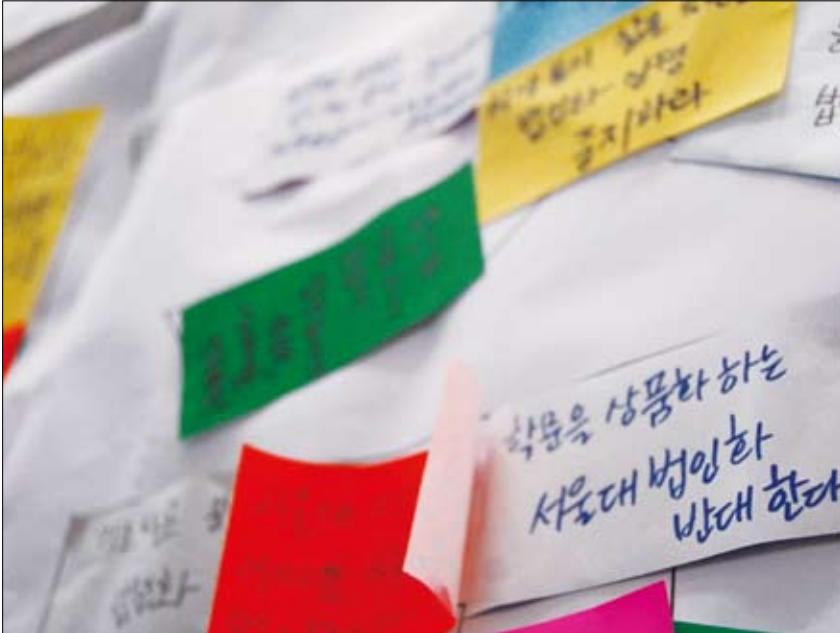
김미호 기자

최근 정부와 서울대가 세종시에 서울대 제2캠퍼스를 건립하는 것과 서울대 법인화를 놓고 ‘빅딜’을 하고 있다는 논란 때문에, 서울대 법인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과부는 부처간 조율을 거쳐 서울대 법인화 법안을 확정된 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내년 예산에 서울대 법인화 지원금으로 2백69억 원을 배정해 놔다. 그동안 서울대 법인화 반대 운동을 이끌었던 서울대 서양사학과 최갑수 교수에게 법인화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들었다.

“우선 법인화는 기본적으로 재정지원과는 아무 연관이 없고 핵심은 대학지배 구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은 총장이 대학을 대표하고 이 총장을 교수들이 뽑는데, 이는 교수가 대학의 주인이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합의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화를 하게 되면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게 되고, 이 법인격의 주인은 이사회입니다. 대학의 주인이 법인 이사회가 되고 학내 구성원들은 피고용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학을 기업화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일본에서도 법인화는 대학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정부가 [대학에] 돈을 대지 않기 위해서, 재정 계획의 일환으로 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법인화되면서 공무원인 대학 직원 10만 명 정도가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교육부 예산이 줄었는데, 줄어든 부분을 모아서 ‘개혁’을 잘하는 대학에 몰아줬어요. 이때 유수한 대학들이 예산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상위] 10개 미만 대학은 이득을 보고 나머지 70개 대학은 완전히 손해를 봤죠. 법인화하고 나서 양극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법인화에 반대하는 서울대 학생들의 목소리

사진 이미지

노무현 말기에 나온 아이디어가 선택적 법인화입니다. 서울대[본부]는 먼저 [법인화]해서 이득을 보고 나머지 대학에 ‘우리가 모양을 좋게 할 테니까 이거 따라가면 될 거야’ 이렇게 설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파이프라인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고, 서울

대는 여기서 파이를 좀더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재정지원 안 하려고 법인화하는 것인데 서울대[본부]는 법인화를 통해서 재정을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상이몽이고 자가당착이죠.

서울대는 아마 법인화해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고등 교육 전체로 보면 엄청난 문제죠. 국립대학 체제가 있어야 유지되는 것들이 있어요. 기초학문과 응용학문 간의 균형발전,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의 균형발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균형발전. 그리고 이틀테면 국립대학 때문에 사립대학이 등록금을 함부로 못 올리는 등 국립대가 교육 공공성의 버팀목 구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울대가 특권의 식으로 혼자 살겠다고 하면 지방대학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학의 존재 이유는 사회에 대한 성찰 능력을 키우는 것이예요. 이게 없으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돼 있어요. 예컨대 미국[발] 금융위기 같은 경우도,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안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 준 것 아닙니까. 몇조 달러의 손실이 났고 전 세계가 위기상황을 겪고 있잖아요. 미국 대학은 기업형 연구대학이라서 사회적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사회에 대한] 성찰능력을 담보해 내는 게 대학인데 말이죠. 이것이 법인화를 반대하는 핵심적 이유입니다.

인터뷰·정리 이현주 기자 | hyunju43@left21.com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치욕의 61주년

전해 표명의 자유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

지난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탄압하며 ‘촛불 진화’에 나섰던 이명박은 올해도 국가보안법이라는 더러운 칼을 휘두르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경찰청장 강희락 취임 직후인 4월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안보위해 사범 1백일 수사’는 공안 탄압의 ‘결정판’이었다. 이 기간에 경찰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민련) 활동가 6명과 2006년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의장 김하얀 씨를 포함해 45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1년 치 검거 ‘실적’인 40명을 1백일 만에 뛰어넘은 것이다.

정부는 이미 9월 말까지 국보법 위반으로 61명을 검거했다. 이는 2000년대 초에 세 자릿수를 기록하다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30~40명대로 줄었던 것에 비춰 보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 탄압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주의노동자신문(이하 사노신)은 “이적 표현물 발행·배포” 등 혐의로 압수수색 당했다.

북한에 비판적인 좌파인 사노련과 사노신에 대한 탄압은 국가보안법이 단지 친북좌파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수사기관이 공안탄압을 위해 사용한 수법은 경악스러웠다. 지난 8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기무사의 민간 사찰 행태를 폭로한 바 있다. 국정원은 범민련 이경원 사무처장에 대해 2003년 7월 30일부터 무려 6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화, 팩스, 이메일을 감청했다.

국정원은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패킷감청도 했다. 범원이 수사기관에 발부하는 감청 허가서는 2005년 1백32건에서 올해 1~8월에만 1백34건으로 크게 늘었다. 발부된 감청 허가서 중 국가보안법 위반 사

건과 관련된 허가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에 28퍼센트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78퍼센트에 이르렀고, 올해 1~8월엔 86퍼센트나 뛴다(민주당 박영선 의원실).

이명박 정부는 일부 활동가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을 사찰, 감시, 통제하려 한다. 경찰은 이미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검색,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 고통민에게 대한 불만과 저항을 억누르려고 보안법이라는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친서민 시기 행각으로 이명박의 지지율이 조금 오르는가 싶더니, 4대강과 세종시 수정을 밀어붙이며 다시 하락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가 다시 휘청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이명박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좌파 마녀사냥으로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불만을 억누르려 할 것이다.

좌파 마녀사냥

지금까지 정부는 저항하기 어려운 작은 단체들을 표적으로 삼았지만 정권의 위기가 심해질수록 이 범위는 더 영향력 있는 단체들로 확대될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정권 말기에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민주노동당을 공지로 몰았던 것을 기억해 보라. 따라서 우리는 항상 단호하게 마녀사냥에 반대해야 한다.

국무총리 정운찬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을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보안법은 ‘정권’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사상·표현의 자유를 원천 부정하고 국민을 감시 대상으로 만드는, 폐지돼야 할 악법이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 위기 책임전가에 맞서 싸우는 이들은 정견의 차이를 떠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

이현주 기자 | hyunju43@left21.com

저명한 국제 인사와 단체 들이 이명박 정부에 항의 성명을 발표하다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앞두고 ‘민주주의수호공안탄압저지를위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민주적 권리를 억누르는 이명박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국제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국제서명운동은 올해 초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민생민주국민회의가 지난해 촛불 운동을 방어하기 위해 조직한 국제방어성명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노암 촘스키와 하워드 진과 같은 저명한 국제 인사들과 프랑스 아타크를 포함해 1백73명의 개인들과 4개 단체가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아래는 이들이 서명한 호소문을 축약한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진보적 단체, 민주적 시민들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촛불 운동의 지도적 활동가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즉각 취하하고 마지막 촛불 수배자가 된 김광일(다함께)과 강민욱(한대련)에 대한 수배를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촛불 운동에 참가한 단체들을 강경 탄압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한편, 2008년 촛불 운동에 대한 탄압은 국제 항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고, 2009년에는 더 많은 진보 단체와 민주적 시민에 대한 탄압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 한국의 용산에서 벌어진 철거민 5명의 죽음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탄압이 부른 살인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에 항의하는 운동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이명박 정부는 즉시 용산 철거민 참사 항의 운동 참가자들을 석방하고 강제 연행을 중단하라.

또,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모든 집회와 시위를 원천봉쇄한 채시위 참가자들을 무차별로 구타하고 2백41명을 연행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 전가하고 민주적 권리를 탄압하는 것에 맞서 진보 단체와 민주 시민들이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민주적 권리

집회·시위에 대한 참가는 민주 시민의 온전한 권리다.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무차별 소환장 발부도 즉각



저명한 국제 인사인 노암 촘스키(왼쪽)와 하워드 진(오른쪽)도 서명에 동참했다.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민주 시민과 진보 단체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국가보안법으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사상·견해 표명의 문제가 결코 탄압과 구속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초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7월 22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판적 언론을 길들이고 대기업들이 언론을 장악할 수 있도록 언론 악법을 통과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 악법에 반대해 파업한 언론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언론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언론 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 언론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지난 8월, 77일 동안 공장점거 투쟁을 벌이며 대량해고에

반대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살인 진압해 노조 위원장과 활동가들을 무더기 구속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장 안 음식물, 의약품 공급을 가로막았을 뿐 아니라 단수와 단전, 최루액 살포, 헬기 저공비행, 테이저건 발사 등으로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했다. 정부와 기업이 저야할 경영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저항을 반민주적으로 탄압해 온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반민주적 탄압을 계속한다면, 전 세계의 진보 단체와 민주적 시민들의 더 커다란 항의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노암 촘스키(MIT 교수), 하워드 진(보스턴 대학 교수), 조지 갤러웨이(영국 국회의원), 알렉스 캘리니코스(런던대학교 킹스 칼리지 교수) 외 스무 나라 교수, 학생, 노동조합·사회운동 활동가 1백69명, 프랑스 아타크 외 3개 단체

철도 파업 평가와 과제

노조 지도부가 기회를 붙잡지 못하다

철도노조 지도부가 12월 3일 파업 중단을 선언했다. 이명박의 강경 대응에 강력하게 맞서지 않고 아쉽게도 빈손으로 업무 복귀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한상률 게이트, 세종시 반발 등 정치 위기로 코너에 몰리고 있던 이명박은 이번 철도 파업에 히스테리를 부리며 전방 위적 탄압을 가했다. 이명박은 전 경찰청장 출신의 철도공사 사장 허준영도 못 미더워 자신이 손수 나설 정도로 탄압에 열을 올렸다.

불법 파업 규정, 체포영장 발부, 무더기 직위해제와 고소고발, 파면 협박 등 그야말로 막가파식 탄압이 이어졌다. 경제 5단체들도 합동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파업 장기화로 생산 활동이 마비되고 국가 신인도가 하락”한다는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이런 십자포화 탄압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파업 참가율은 꽤 높았다. 유례없는 단협해지까지 자행하는 “먹통” 정부와 사장에 대한 현장조합원들의 불만은 일주일이 넘어서도 1만 2천여 명이 파업에 참가할 정도로 강했다. “보름이고 한 달이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고, 한 지부에서는 장기화를 대비해 1인당 50만 원씩의 투쟁 기금을 모았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무엇보다 이번 파업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명박에 맞선 투쟁의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 준 이번 파업은 “국민파업 2호”라는 별칭을 얻기 시작하며, 광범한 지지를 끌어들였다.

“철도의 승리가 국민의 승리”라는 촛불 네티즌들의 지지, 민주당까지 거든 야 4당의 ‘공공기관 선진화’ 비판, 참여연대와 <한겨레> 등 시민단체와 자유주의 언론 들까지 나선 “노조탄압 공간몰이” 규탄 등 여론은 파업 노동자들의 편이었다.

교수들과 각계 원로들도 지지 선언을 준비하고 있었고, ‘파업이 청년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저들의 비난을 조롱하듯, “반드시 승리해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네티즌들의 응원이 줄을 이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당한 파업’



이런 열기를 받아 안고 싸우기는커녕 투쟁을 접어 버린 철도노조 지도부

사진 이미지

을 옹호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기자회견과 지지 행동도 예고돼 있었다.

이런 지지 속에서 철도 파업은 이명박에 맞선 저항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단호한 투쟁을 이어가며 연대를 확산시키면 판세는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철도노조 지도부는 이런 기회를 저버리고 파업을 중단했다.

주머니 칼

‘복귀했다가 곧 다시 싸우겠다’는 변명도 하고 있는데, 일찍이 독일의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가 말했듯이 노동자들의 자주적 행동은 지도부가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는 주머니칼’이 아니다. ‘가장 조직력이 높을 때 끝내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도 있다. ‘박수 칠 때 떠난다’는 식인데 권투선수가 가장 힘과 컨디션이 좋을 때 싸워야지 링을 내려가는 게 말이 되는가?

철도노조 지도부는 사실 이번 파업을 이끄는 과정에서 철도 노동자들의 힘을 최대한 사용하려 하지 않았다. 산개가 아니라 거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거점 형성이 정치적 초점을 제공하며 노동자들의 사기와 투쟁 의지를 끌어올리며 무엇보다 조합원들이 노조 지도부를 통제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점을 부답스러워 했던 듯하다. 결국 곳곳에 흩어져 있던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지도 못한 채 전화 연락이나 TV 속보를 통해 파업 중단 소식을 들어야 했다.

철도노조 지도부는 처음부터 필수유지 업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합법 파업에 너무 연연하며 파업의 위력을 최대화해 속전속결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한사코 피했다. 파업 파괴자 구실을 하는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하는 ‘피켓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불법화돼 있

긴 하나 그만큼 피켓팅은 파업의 위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전술인데 말이다.

투쟁의 전진을 가로막고 국가와 전면 충돌을 회피하며 노조 조직 기구의 보존만을 중시하는 노조 상층 지도부의 보수적 속성이 이번 철도노조 지도부의 모습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철도노조 지도부는 “국가 경제를 뒤흔들면 안 된다”는 저들의 협박에도 취약했다. 부자감세와 4대강 삽질에 돈을 퍼붓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해 “국가를 흔들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투쟁을 확대·강화하는 데 주저했다.

철도노조가 혼자 고립돼 싸우도록 놔둔 공공운수연맹과 민주노총 지도부의 연대 건설 지연도 문제였다. 공공부문 노조 지도자들은 하반기 공공부문 투쟁의 첫 포문을 연 10월 10일 집회에서부터 그토록 “공동 투쟁”을 강조했으면서, 실

질적인 공동 투쟁을 실행하지 못했다.

공공운수연맹 지도부는 2차 파업 날짜를 일주일이나 연기하며 멀찌감치 투쟁 일정을 잡았고, 민주노총은 5일 계획했던 연대 집회 주최조차 취소하며 늦장을 부렸다. 이명박의 위기 탈출에 힘을 보태며 투쟁에서 이탈한 한국노총 지도부의 배신도 투쟁 전선에 찬물을 끼얹었다.

우파 노조 지도자들의 배신에 이어 상대적 좌파 노조 지도자들도 한계를 보인 셈이다. 철도 파업의 승리가 전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계급간 세력 저울에도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고리였는데도 말이다. 이명박에 맞선 투쟁의 상징이 되고 있던 철도 파업이 정치투쟁으로 발전할 조짐도 있었다.

아쉽게 파업이 종료됐지만, 이번 투쟁은 이명박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자체의 정당성을 땅에 떨어뜨렸다. 이명박이 몰상식한 ‘반노동·노조 파괴’의 선봉장임을 다시 한 번 명백하게 드러내 보였다. 역사상 최장기인 8일간 파업으로 철도노조의 새로운 역사를 쓴 철도 노동자들의 의식과 조직도 성장했을 것이다.

더구나 철도 파업이 중단됐지만 이명박의 위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이명박은 지금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도국동 땅’ 진실을 감추려고 언론까지 통제하며 인간힘을 쓰고 있다. 이명박은 4대강·세종시 반발이라는 첩첩산중의 난관에 부딪혀 있고 아프가니스탄 파병도 큰 반발을 낳고 있다.

기아차 좌파 집행부의 당선에 이어, 올해 초 민주노총을 탈퇴한 인천지하철노조 선거에서도 민주파 후보가 당선한 것에서 보듯 노동자들의 자신감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 노동자 운동과 진보진영은 실망하지 말고 부패한 이명박 정부의 친부자 본질을 폭로하며 투쟁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선진화’에 맞선 투쟁을 재개하며 반이명박 정치투쟁과 결합을 시도해야 한다.

박설 다함께 노동조합팀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빈곤의 웅덩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의 사회주의자 **알란 마스**는 미국의 많은 빈민과 노동자들이 빈곤과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한다.

2008년에 굶주림에 시달리는 미국인의 수가 크게 늘어 총 5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인 여섯 명 중 한 명이 굶주리고 있는 것이다.

미 농무부의 공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식량 불안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수가 3분의 1이나 늘어 15년 전 정부가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4천9백만 명 가운데 3분의 1은 이 분야 연구자들의 표현으로 “식량 안전이 대단히 취약한” 부류에 속한다. 즉,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끼니를 거르거나 식사량을 줄이거나 매해 일정 기간 충분한 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3분의 2는 ‘식량 불안’ 집단으로 분류되는데, 그들은 값싸고 영양가 낮은 음식을 먹거나 ‘푸드스탬프’(연방 정부가 저소득자에게 발급하는 식량 배급표) 같은 정부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거나 자선 단체의 무료 급식소를 찾아야만 충분한 양을 섭취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더 어두운 내용도 포함돼 있다. 예컨대,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미국의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사람들 – 임금삭감과 실업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게 됐다.

“식량 안전이 대단히 취약한” 가구의 수는 1년 동안 거의 60퍼센트나 늘어 50만 가구에 이르렀다.

즉, 아동 4명 중 1명이 굶주림에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또, 1천만이 넘는 편모 가정들은 셋 중 한 가구가 ‘식량 불안전’을 겪고 있다.

더구나 이 통계들은 2008년 통계다. 최악의 실직과 실업 사태는 올해 초부터 시작됐다. 전국에 약 2백 개의 식량배급소를 운영하는 사회복지 단체 ‘피딩 아메리카’의 대표 빅키 에스카라는 “실업률과 근로 빈곤자의 수가 폭증하면서 이듬해[2009년]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굶주림 — 21세기 미국의 현실

에스카라처럼 21세기 미국의 굶주림 문제를 해결하려 애써 온 사람들은 굶주림의 악화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최소 10년간 지속돼 왔으며, 상식과 달리 가장 가난한 사람들만이 ‘식량 불안전’에 시달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예컨대,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농무부의 다른 보고서를 인용해 이렇게 말했다. “(경제 불황이 시작되기 전부터) 연방 정부 기준으로 ‘식량 불안전’으로

분류되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약 3분의 2에 풀타임 일자리를 가진 구성원이 한 명 이상 있다. 이것은 경기 후퇴가 시작되기 전부터 미국인 수백만 명이 저임금 때문에 아이들에게 적절한 영양을 제공하기 힘들었음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를 보면, 정부의 푸드스탬프 지원을 받는 미국 가구 중 약 40퍼센트가 ‘근로소득’을 갖고 있다. 2년 전과 비교해 약 25퍼센트가 늘어난 것이다. 농무부 관리들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시간이 축소된 것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노동부 통계를 보면, 현재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사상 최저인 33시간이고, 8백80만 명이 풀타임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

경제정책연구소의 하이다 쉬에르홀츠는 <파이낸셜타임스>에 이렇게 말했다. “불황으로 사라지지 않은 일자리조차 가족을 먹여 살리는 데 필요한 임금 수준이나 노동시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 같다.”

경제 불황이 식량 불안전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로 푸드스탬프에 등록된 사람의 수가 사상 최대 수준 — 3천6백만 명으로 불과 2년 사이 40퍼센트나 증가했다 — 인 것을 들 수 있다.

2009년 초 의회가 통과시킨 경기 부양법으로 푸드스탬프가 개인에게 제공

하는 식량이 17퍼센트 증가했지만, 이것은 1인당 1백33달러(약 15만 원)에 불과한 액수다.

더구나 정부의 엄격한 제한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일부 주에서는 2천 달러(약 2백30만 원) 이상의 은행잔고를 가진 가구들은 푸드스탬프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신규 실업자가 정부의 지원 없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푸드뱅크(시민 단체가 운영하는 식량배급소에 도움을 청한다. 지난해 푸드뱅크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의 수가 30퍼센트나 늘었다. ‘피딩 아메리카’의 에스카라가 운영하는 푸드뱅크들은 2천5백만 명에게 식량을 제공했는데, 그중 대다수가 푸드스탬프를 받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굶주림은 21세기 미국의 현실이다. 소수의 최상층 인사들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갖고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25~75세 사이에 최소한 1년 이상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사는 경험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미친 사회의 우선순위를 뒤바꾸기 위한 노동자 투쟁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번역 김용욱 기자

연대연합 논의에 부쳐

진보진영은 대안적 정치연합체를 진지하게 건설해야

김인식 kis@left21.com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오늘날 정치 현실에 들어맞는 말이다. 보수파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까운 지면을 낭비할 필요는 없으리라.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세간의 냉소와 질책을 진보진영이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다.

자기만의 세계에 고립돼 사는 소종파를 제외하곤 연대연합의 필요성을 감히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공동의 적에 맞서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대량 해고, 임금 동결과 삭감, 복지 축소 등)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반민주적 탄압). 노동자 계급과 억압 받는 사람들의 즉각적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단결해야 한다.

효과적인 단결 방법은 공동전선을 건설하는 것이다. 공동전선은 상황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여러 형태들을 취할 수 있다. 지금도 이미 다양한 전선들(산업, 민주주의, 전쟁과 파병 등)에서 다양한 종류의 공동전선들이 존재한다. 이런 공동전선들은 이명박과 권력자들의 공세에 맞서 함께 저항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전투성을 증대시켜 마침내 노동자 계급이 수세에서 공세로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다.

한편, 진보진영은 이런 공동 투쟁 속에서 경제 위기의 효과 등에 맞선 저항을 지지·강화하기 위한 단호한 노력과 선거 대응을 함께 수행하는 정치연합체(진보대연합)를 창출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도 아울러 받고 있다. 진보 세력들이 각개약진을 해서는 진보적 정치 대안을 효과적으로 건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노동당의 분당이 정치적 실패라는 대중적 자각이 존재한다. 그래서 조직 노동자 계급의 연합체인 민주노총이 가장 적극적으로 진보정당 재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지극히 온당한 요구다.

진보 세력들이 각각 자체의 힘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커다란 정치적 착각(내지는 아집)이다. 그것으로는 결코 대중의 정치적 대안 부재감을 해소해 줄 수 없다.

사실, 2008년 초 분당 전까지 민주노동당이 이런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2004년 총선에서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자 민주노동당은 그 뒤 다른 진보 세력들과 광범하게 단결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 2007년 대선에서도 민주노동당은 진보대연합을 결정했지만 진지하게 추진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바깥에 연합할 세력이 누가 있느냐는 정서가 강했다. 그 결과 노무현 정부의 개혁 실패로 인해 정치적 환멸감을 느끼고 있지만 여전히 민주노동당에 유보적인 광범한 진보 대중과 접촉할 기회를 놓쳤다.

이제 와서 그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진보적 정치연합체의 재건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분열 경험으로 인한 갈등과 중요한 정치적 불일치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진보대연합을 구성해야 한다.

지난 4월 울산북구 국회의원 선거와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진보가 단결하면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런 단결의 경험을 일회적 선거연합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대안적 정치연합체 건설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민주노동당 일각에서 나오는 민주노동당 독자성 강화론이 우려스럽다. 물론 진보 정치 세력들이 자체의 조직과 정치를 발전시키려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자체의 조직과 정치를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단결의 요구를 회피하는 것을 뜻한다면 그것은 종파주의다.

민주노동당 독자성 강화론은 종종 진보연대 강화론과 한뼘음으로 제기되곤 한다. 진보연대는 애초 표방한 광범한 상설연대체가 되지 못했다. 결정적으로 민주노총이 참가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진보연대는 실패작이라는 평가가 자주파 내부에서도 나오는 판이다. 진보연대의 실패는 자주파가 정치적·조직적으로 느슨한 연대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사상을 다른 동맹들에게 강요(‘패권주의’)하려 했던 데서 비롯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독자성과 진보연대 강화론보다는 노화찬 진보신당 대표, 민주노동당 정성희 중앙연수원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이 제기하는 진보대연합이, 구체적 상은 상이할지라도, 시대적 요청에 더 부응하는 접근법이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연합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먼저, 분명하게 밝혀 둘 것은 민주당이 자본가 야당이라는 점이다. 노동자 계급의 적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우리 운동은 민주당 10년 집권 시절에 그 정부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했다.

자본가 야당과 맺는 연합의 진정한 문제점은 그 연합을 위해 진보진영이 불필요하게 진보적 요구를 삭감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민주당과 연합하기 위해 민주당이 반대할 만한 쟁점들, 예컨대 반신자유주의나 파병 반대를 내걸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하승창 ‘희망과 대안’ 삼일운영위원).

민주당과의 타협은 전적으로 그 불가피성이 인정될 때(가령 언론약법이나 용산 참사 항의 투쟁의 경우), 그것도 비판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그러나 대다수 진보진영은 이 투쟁에서 민주당에 무비판적으로 끌려다녔다), 진보의 강령적 요구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불필요한 타협이자 무엇보다 투쟁에 해악적이다.

민주당의 “반성과 성찰”을 전제로 연합할 수 있다는 변형 버전의 민주연합론도 있다(민주노동당 이수호 최고위원). 그러나 민주당이 집권당 시절에 한미FTA, 이



지난 4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당선은 진보진영 단결이 낳은 승리였다. 이 경험을 진보적 정치연합체 건설의 발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라크·아프가니스탄 파병, 비정규직 확대를 추진한 것은 그 당이 자본가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기 때문이었다. 그런 민주당이 자본가 계급의 이해를 근본으로 거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잡겠다는 것만큼이나 무망하다. 민주당 대표 정세균도 “자유선진당이나 친박연대까지[포함하는], 모든 세력과 정책연대”를 하겠다고 했다.

국민참여당도 진보대연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참여당은 “노무현의 적자”임을 자임한다. 노무현은 《진보의 미래》에서 “신자유주의 패키지 안에 있는 절반, 상당히 많은 패키지를 김대중과 노무현이 채택을 해 버렸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말고는 “다른 방법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노무현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비교해 보자(둘을 비교하는 것이 차베스와 그 지지자들에게는 모욕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노무현과 차베스 둘 다 자본주의 정부의 수장이(였다). 둘 다 거대한 대중 운동 덕분에(노무현은 탄핵 반대 운동 덕분에, 차베

스는 쿠데타 반대 운동 덕분에) 정치적으로 구사일생할 수 있었다.

정치적 회생 뒤 둘은 상이한 길을 걸었다. 노무현은 자본가 계급의 신자유주의적 압력에 저항하기보다 굴복했다. 대중에게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라고 호소하기는커녕 반신자유주의 운동을 탄압했다.

반면, 차베스는 때로 모호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지만 우파의 압력에 맞서 대체로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며 대중 투쟁을 호소하고 있다. 그 덕분에 베네수엘라 운동은 급진화할 수 있었다.

국민참여당은 노무현의 ‘좌파 신자유주의’(제3의 길 또는 사회적 자유주의) 사상을 “진보주의”라고 본다. 노무현이 《진보의 미래》에서 신자유주의가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분단선이 될 수 없다고 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국민참여당을 진보대연합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시도(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의장, 민주노동당 이수호 최고위원,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 2010연대 등)는 진보대연합의 정치적 시계(視界)를 뿌옇게 만들 것이다. 그리 되면 노무현에게 얼마간 정서적 미

안함을 갖고 있지만 그 정책들(특히, 신자유주의와 파병)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광범한 진보개혁 대중을 진보적 정치 대안으로 불러모으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국민참여당 부위원장 천호선은 “‘민주대연합’ 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란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며, 승리의 가능성이 없는 연합이라면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진보대연합에 부정적 태도를 취했다.

한편, 일부 자주파들은 전략적으로는 진보대연합을 추진해야 하지만, 전술적으로는 민주대연합을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발전시키는 듯하다. 민주당과의 연대연합 반대를 못박아서 안 된다는, 다시 말해 민주대연합의 불씨를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 듯하다. 물론 선거의 경우, 진보진영이 후보를 내놓지 못한 선거구에서는 진보진영이 민주당 후보의 전력과 공약을 살펴보고 그가 진보의 기준에 그런대로 근접한다면 그에게 비판적 투표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보진영의 대안적 정치연합체 건설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민주당과의 연합 문제를 전술의 이름으로 모호하게 열어 놓아서는 안 된다.

당 모델이나 공동전선 모델이나

진보대연합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협소하다. 물론 양대 개혁주의 정당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빠진 연합을 두고 진보대연합이라고 부르는 것쯤은 웃자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다시 건설해야 할 진보대연합은 ‘도로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진보적인 NGO에서부터 급진 좌파까지, 단체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참여하는 되도록 광범한 연합체가 돼야 한다.

광범하다는 것은 동시에 정치적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정치적으로 이질적인 세력과 개인 들을 과거 민주노동당처럼 당 모델로 통합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데다 효과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조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느슨한 연합체, 즉 공동전선적 모델이 단결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확실히 우파 정부의 공세 때문에 진보진영이 광범하게 단결해야 한다는 조건이 창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수렴은 단지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이한 경향이 섞이고 공존할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조직 구조가 필요하다.

분당 이전 민주노동당은 그 내의 정치적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당 모델을 따랐다. 수백 개의 당 강령이 존재했고, 상이한 정치 경향들이 상대 경향들에게 자신

의 강령을 따를 것을 끊임없이 강요했다. 자주파는 흔히 당을 패권적으로 운영했고, 당 모델을 적극 주창했던 평등파 리더들은 다른 경향의 정치적·조직적 독자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토론과 실천보다는 많은 문제들에서 끊임없이 긴장이 생겨났다.

따라서 당 모델보다 진보대연합 각 구성 성분의 정치적 독립성, 즉 독자적 행동권을 완전히 보장하고 서로 비판이 자유로운 공동전선 모델이 진보진영의 정치적 재통합을 이루는 데서 더 나을 것이다.

그리고 옛 민주노동당처럼 수백 개의 강령에 근거하기보다는 현 시기 중요한 과제들 — 경제 위기 책임 전가에 맞선 저항,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과 억압 강화, 전쟁과 파병 반대 등 — 에 비춰 뽑아낸 수십 개의 개방적 강령들에 근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요리책에 적혀 있는 조리법 같은 게 진보대연합에는 없다. 상황의 필요를 회피하지 않는 능동적 태도와 정치의 기예를 실행하려는 진지한 자세, 즉 원칙 있는 태도와 전술적 유연성, 불가피하고 필요한 타협을 거부하지 않는 자세를 결합시키려는 노력이 그 출발점이다.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

세계 지도자들은 기후변화를 막을 생각도, 의지도 없다

장호중 기자 | redhuc@gmail.com

[면접자] 12월 7~1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15차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COP15)가 열린다. 그러나 이 회의는 아무 성과 없이 끝날 듯하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실질적인 감축 목표 설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와와 인류의 미래보다 기업의 이윤을 더 신경쓰는 이들에게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

전 세계 기후변화 활동가들과 진보정당, 노동조합 등은 코펜하겐 회담장 앞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 행진'이라고 부르는 이날 시위는 그린피스, 지구우넷 등 환경단체들뿐 아니라 각국의 녹색당 등 진보정당과 노동조합, 남반구초점 같은 대안 경제와 운동 단체 등 59개 나라 4백22개 단체의 공식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행동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녹색연합, 다함께, 사회당이 이 시위를 지지하고 있고 기후변화 활동가 수십 명이 직접 코펜하겐에 가서 이 시위에 참가할 예정이다. 덴마크 활동가 요른 안테르센은 <레프트21>에 보낸 편지에서 이 시위에 적어도 수만 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단체들이 이미 독자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대한 항의 시위를 위해 단결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대중적이고, 요란하고, 눈에 띄는 시위를 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사이비 기후변화 대책

이명박은 지난 11월 유엔에서 열린 기후 정상회의에서 자신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자랑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하다', "경제를 살리겠다"로 시작한 거짓말 시리즈의 최신판일 뿐이다. 주요 언론들은 "2020년까지 30퍼센트를 줄이겠다"는 정부 발표를 대서특필하고 대기업의 기업주들은 엄살을 부렸지만 이는 완전한 사기다. 기후변화에 관한 가장 권위있는 연구소인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최소한 80퍼센트를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미 시

"녹색·기후 네트워크, 시민단체, 정당, 좌파와 노동조합도 이 시위에 함께할 것입니다. 정치인과 언론은 이 시위를 탄압하려 합니다. 그들은 '폭도' 수천 명이 코펜하겐을 쓸어버리려고 한다는 식으로 비난합니다. 그들은 기후변화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문제를 가라려고 시위대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갈등은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전 세계의 평범한 사람들과, 그냥 지금처럼 살기를 원하는 전 세계 지도자들·기업인들·신자유주의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영원히 지금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 지도자들은 자신들도 온실가스를 줄이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북유럽에서 가장 큰 에너지 기업인 '동'(DONG)과 '바텐폴'(Vattenfall)조차 온실가스를 줄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렇게 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그들은 2050년 목표를만 들거나 아니면 구속력이 없는 2020년 목표를만 만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엔 기후회의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일련의 합의들이 이뤄지는 할 겁니다. 그러나 없었던 그들의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협상은 교토 의정서에 포함된 —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북반구에서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데 실패한 — 시장 '대안'들을 유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협상들은 구속력이 없고 사회적·지구적 정의의 원칙에서도 벗어난 것들일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이 '아래로부터의 행동'이라며 이 시위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 운동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기후회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 지도자들은 협상 결과를 '인류를 위한 거대한 일보 전진'이라고 포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담장 밖에서 수만 명이 시위를 벌인다면 이런 식으로 추켜세우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입니다. "기후회의의 결과가 무엇이든 거대한 시위는 회의 이후 벌어질 투쟁을 건설하는 강력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위는 단지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벌어질 투쟁들을 준비하며 지역적·국가적·세계적 수준에서 개인과 단체들을 연결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전 세계 지도자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난 몇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코펜하겐 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같은 날 시위가 벌어질 것이다. 올해는 기대가 컸던 만큼 그런 기대를 저버린 전 세계 주요 지도자들에 대한 분노도 엄청날 것이다. 이 점에서 한국의 환경 단체들과 기후 활동가들이 국내에서 대중운동을 건설하는 데 다소 회의적이거나 소극적인 것은 아쉬운 일이다. 한국에서도 4대강 등 이명박 정부의 사이비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반대가 많은 만큼 이를 저지하고 진정한 대책을 요구하는 대중 운동을 건설하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



2005년 미국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앙 기후변화 재앙은 세계 지도자들이 아니라 세계민중의 힘으로 막을 수 있다.

기후 변화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팀 워커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기자

거대 기업들이 지구를 망치고 있다. 그들은 엄청난 양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이윤을 한해 미친 듯이 질주하면서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한다.

셀 오일이 니제르 삼각주 지역을 황폐하게 만들고,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이 캐나다 앨버타 주에서 공해 산업 — 독성 폐기물로 원주민의 땅을 오염시키고 — 잉글랜드 섬보다 더 넓은 숲을 파괴했다 — 으로 돈을 버는 등, 기업의 세계는 기후 파괴범들의 세계다.

이런 사례를 집했을 때 경제 성장, 개발과 진보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 관점에서 보면, 기후 문제의 근원은 18세기 말 산업혁명이 촉발한 사회 변화에 있는 것이다.

어떤 이는 지구상의 자원으로 모든 사람이 서구의 생활수준을 누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개발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사실, 지난 2백 년 동안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기술 발달 덕분에 사상 최초로 인류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 — 식량, 쉼 곳, 난방, 의약품 등등 — 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예컨대, 지구상의 모든 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의 식량이 존재한다. 문제는 그것의 분배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자본주의가 대단히 모순적 체제라는 것을 보여 준다. 자본주의는 매우 역동적이다. 그 이전 사회와 비교해 물건과 식량을 엄청난 규모로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자본주의는 극소수에게

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나라들이 서구보다 늦게 지금 산업화하고 있다고 그들보고 기후변화에 책임지라고 말하는 것은 황당하다.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인당 배출량은 여전히 미국이 훨씬 더 많다.

또, 중국의 오염 배출 중 상당량은 서구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 공장에서 나온다. 이들 기업의 생산품 중에는 사회를 위해 생산할 필요가 없거나 해로운 것들이 꽤 많다.

설상가상으로, 지금까지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남반구다. 코펜하겐 기후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난한 나라에게 개발 속도를 늦추라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위선적인 서구 정부들은 가난한 나라들이 기후 위기의 대가를 치르기를 바라는 것이다.

서구의 노동계급 대중도 속죄양이 되고 있다. 주류 언론들은 저가 항공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럭셔리'한 비즈니스 여행

자들이 공해물질을 가장 많이 내뿜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말이다. 물론, 비행기 여행을 줄이지 말자는 주장은 아니다. 비행장을 늘리는 것보다 고속철도를 확충하는 것이 더 적은 탄소를 배출하는 더 나은 대안이 될 것이다.

내 말의 핵심은 보통 사람에게 그들의 잘못이 아닌 것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회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나라 안을 이동하는 데 기차보다 비행기가 더 싼 경우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많다. 그러나 해결 과정에서 이윤 논리에 도전할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의 해답은 기술을 멀리하거나 비행기 급지 캠페인을 벌이는 데 있지 않다. 사실, 다른 체제에서는 오히려 기술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생산 방식의 도입에 반대한다. 값싸고 이윤을 갈아먹기 때문이다.

이런 기업 논리 때문에 기후 위기가 발

생한 것이다. 기업 권력의 방해가 없었더라면 생산은 공해물질을 내뿜고 지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인류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었을 것이다.

생산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 세계에는 모든 사람에게 쾌적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부가 존재한다. 부자들의 재산을 몰수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면 된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기업들과 해괴한 '럭셔리' 생활을 누리는 부자들을 일차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 근본적으로, 혼란스런 자본주의 체제를 제거하고 사회를 재조직해야 한다. 해답은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기후변화 위기를 영원히 종식시킬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회주의 사회를 위한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번역 김용욱 기자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⑧

생태 문제를 분석의 출발로 삼은 마르크스

마틴 엠스 영국의 지구 온난화 반대 활동가. 지은 책으로 <기후변화 — 왜 해야 하지 않는 대안?>(더함께가 있다).

인간 사회와 지구 환경 간의 생태적 관계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중대한 관심사가 됐다. 인간이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예컨대 강으로 흘러 들어간 유독성 화학 물질과 죽은 물고기 간의 연관은 쉽게 알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 전체에 끼치는 영향은 좀더 포착하기 어렵지만 더 중요하고 논쟁적인 점점이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래 화석 연료를 태워서 나온 가스와 지구 온난화 사이에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인간 사회의 발전에 관한 글을 썼을 때 그들은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역사 이론을 요약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류는 정치·과학·예술·종교 활동을 하기 전에 먼저 의식주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 말은 수렵·채집인부터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 시대 사람들, 봉건 영주와 농노에 이르기까지 역사 전체에 적용될 수 있다.

이처럼 [인류가] 자연에 의존한다는 점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사회 구조의 발전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인간은 단지 자연에 종속된 존재인 것이 아니라, 농업이 등장한 이래 농부들은, 다른 사람들이 먹고 입고 연료로 쓰는 곡식의 수확량을 늘리려고 자연 환경을 바꾸는 기술을 사용해 왔다.

농업이 사회의 식량을 대부분 생산하는 방식이 되기 훨씬 오래 전부터 인간의 활동은 자연에 영향을 끼쳤다. 아마 가장 분명한 사례는 밭재(밭작물)인 것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농업을 위한 밭목 탓에 땅이 침식돼 오래된 항구와 피난처가 이 흙으로 매워지는 등 중대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노르만 정복 시절부터 서유럽은 인구 팽창으로 밭재가 크게 늘었다. 이 과정은 유럽 각국이 식민지 지배 야욕 때

에 해군을 대규모로 육성하기 시작한 1500년대 이후 더욱 빨라졌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전에는 인간의 활동이 자연에 끼치는 영향은 지리적으로 제한돼 있었으며 세계의 생태계에 끼친 영향도 미미했다. 자본주의가 발전해 지배적 경제 체제가 되자 인간이 자연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더 빠르게 강력해졌다. 동시에, 자본주의의 핵심인 경제적 경쟁 때문에 자연을 보는 관점도 매우 달라졌다.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처음으로 자연이 순전히 인간을 위한 대상이 되고 순전히 유용한 물질이 됐다. [자연이] 더는 그 자체의 힘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의 자율적 법칙을 이론적으로 발견하는 일은 자연을 소비 대상으로 삼거나 생산수단으로 삼아 인간의 욕구에 자연을 종속시키려는 착각일 뿐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기술을 혁신적

으로 사용하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원료에서 이윤을 최대한 뽑아내려 애쓰는 체제가기 때문에 자연을 전혀 없는 규모로 '착취'한다고 생각했다. 최근 존 벨라미 포스터 같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생태 문제에서 보여 준 통찰들을 복원해야 했다. 그동안 마르크스주의는 흔히 반(反)생태적이라고 비난받았다. 특히, '녹색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했다. 이런 비난은 흔히 두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옛 소련 같은 나라들에서 벌어진 끔찍한 환경 파괴를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의 소행으로 혼동하는 데서 비롯한 비난이다. 둘째, 마르크스주의가 단지 인간 사회의 산업 성장과 기술 발전을 추구할 뿐 지구가 어찌되든 개치지 않는다고 보는 데서 비롯한 비난이다.

마르크스주의를 후자처럼 이해하는 것은 조야한 오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모두 오늘날 자본주의의 환경 문제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한 우려를 명확히 표명한 바 있다. 엥겔스는 밭재가 낳은 문제들을 흥미롭게 설명하면서 단기적 이익을 노리고 생산하는 자본가들이 오직 눈앞의 성과에만 몰두한다고 말했다. 자본가들은 자신이 판매한 상품이 어찌되든, 자신들의 활동이 자연에 어떤 영향을 끼치든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엥겔스는 이렇게 말했다. "쿠바의 산기슭을 불태우고 그 재에서 한 세대 동안 충분히 사용할 양의 비료를 얻어 수익성이 매우 높은 커피나무를 기르는 스페인 농장주들은 무엇을 걱정했는가! 나중에 열대성 오후로 토양의 표면이 쓸려 내려가 바꾸는 기술을 사용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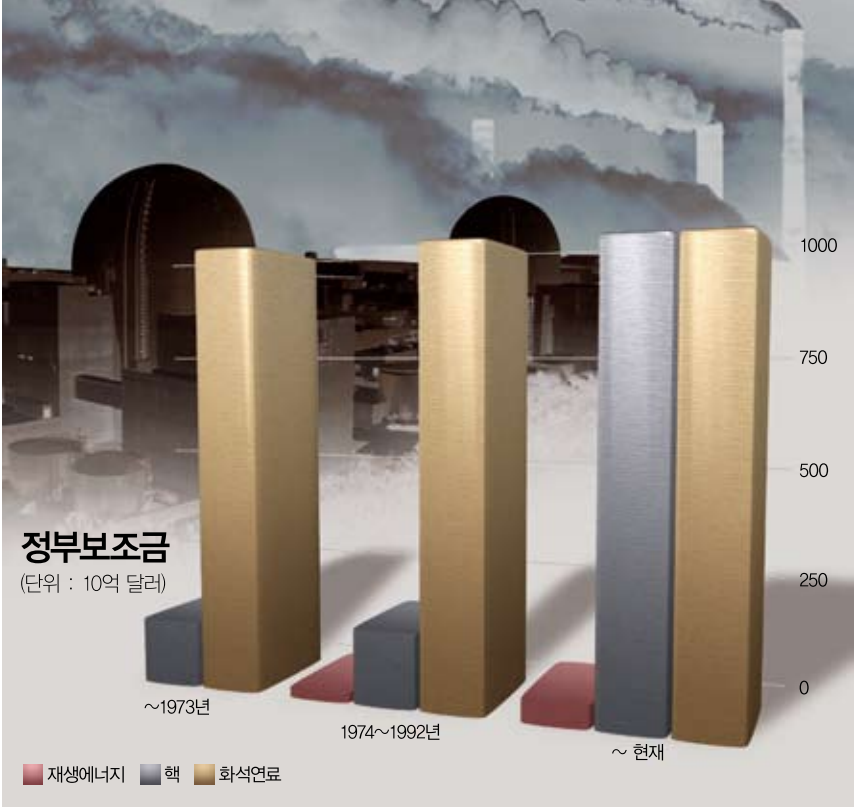
마르크스주의는 자연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자본주의의 생산과 인간 사회를 모두 이해하기 때문에 어째서 환경 파괴가 이윤을 바탕으로 하는 체제의 논리적 귀결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는 생태 위기가 이 흙으로 매워지는 등 중대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노르만 정복 시절부터 서유럽은 인구 팽창으로 밭재가 크게 늘었다. 이 과정은 유럽 각국이 식민지 지배 야욕 때

에 해군을 대규모로 육성하기 시작한 1500년대 이후 더욱 빨라졌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전에는 인간의 활동이 자연에 끼치는 영향은 지리적으로 제한돼 있었으며 세계의 생태계에 끼친 영향도 미미했다. 자본주의가 발전해 지배적 경제 체제가 되자 인간이 자연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더 빠르게 강력해졌다. 동시에, 자본주의의 핵심인 경제적 경쟁 때문에 자연을 보는 관점도 매우 달라졌다.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처음으로 자연이 순전히 인간을 위한 대상이 되고 순전히 유용한 물질이 됐다. [자연이] 더는 그 자체의 힘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의 자율적 법칙을 이론적으로 발견하는 일은 자연을 소비 대상으로 삼거나 생산수단으로 삼아 인간의 욕구에 자연을 종속시키려는 착각일 뿐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기술을 혁신적



핵 에너지와 화석연료 지원이 '녹색' 예산?

다함께의 이론지

마르크스21
3호가 새로 나왔습니다

3호(2009년 가을호) 목차

특집 21세기 한국 좌파의 진영 <회합> & 정책서

쟁점 한국 사회 변혁의 민주주의 <전지율> 여성 운동의 주요 쟁점들 <정민희>

일반 이론 심층 탐구
유럽과 마르크스주의 <해미 바란> 마르크스의 소외론 <주디 루스>

시류 분석
민중주의의 NL, 노선 재구성 시도 <김하영> 새사건의 경제적 분석과 대안 <강동호>

우석훈과 사회적 경제 <이승우> 칼 폴라니 사상에 대한 비판적 평가 <이현규>

실현을 위한 위하여
혁명정당과 민주주의 <올렉스 옐리나코> 초기 신좌파의 마르크스주의 <홍 불해리>

사평 박노자의 (원곡으로 <더 원곡으로>) <정병호> 이명박의 (좌파는 어떻게 좌파가 됐... <이종필>

구독 신청 문의
Tel 02-2271-2395 / Fax 02-2271-2396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판)
인사점(건국대판)
물무질서(군관대판)
이름책방(대림대판)
노동(동국대후문)
숨어 있는 책(신촌)
동방책사(서울신 한대공작장 앞)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서울 | 매주 월·금 저녁 7~8시
강남역 6번 출구 100m 파리크라상 앞
신촌역 3번 출구 버거킹 앞
홍대입구역 4번 출구 / 혜화역 4번 출구
명동 명동 예술극장 앞 / 건대입구역 5번 출구

대전 | 매주 금요일 오후 7~8시
갤러리아 타임타운 뒤 버스정류장 앞

경제 위기와 자본주의의 미래 논쟁

자본주의의 미래 — 현 경제 위기의 원인과 전망

다음은 런던 킹스 칼리지의 두 라이벌 학생 모임인 ‘자본론 강독 그룹’과 ‘비즈니스 클럽’이 공동 주최한 ‘자본주의의 미래 — 현 경제 위기의 원인과 전망’의 발제와 정리 발언을 녹취·번역하고 요약한 것이다.

발표자인 **알렉스 캘리니코스**(아래 사진)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자 킹스 칼리지 교수이며,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 《자본주의의 대안과 사회주의 가치 논쟁》(책갈피)의 저자다. 또 다른 발표자인 **마틴 울프**(오른 페이지 아래 사진)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수석 경제 평론가이며 《금융공황의 시대》(바다출판사)의 저자다.

녹취·번역은 동시 통역사이자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책갈피)를 번역한 천경록이 해 주었다.



모두 알다시피 우리는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비록 지난 몇 개월 사이 경기가 비교적 안정되긴 했어도 여전히 IMF는 올 한 해 동안 세계 무역이 12퍼센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수십 년 동안 세계 무역이 매년 플러스의 성장을 기록한 것에 비춰 보면 엄청난 일이다. 올해에는 또한 세계경제의 산출량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도 있는데, 이 역시 경제사적 대사건이다. 주류 경제학의 관점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이상 현상이다. 이번 위기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미래가 파괴됐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면 위기의 원인을 규명해서 교훈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주류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다. 주류 경제학 자체에 경제 위기가 끼어들 틈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

나는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기초로 수행했던 정치경제학 비판이야말로 주류 경제학보다 세계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먼저 마르크스가 이해한 자본주의의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보자. 첫째는 계급 착취다. 달리 말해, 자본주의 하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 관계는 사회의 생산 수단을 통제하는 계급인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는 관계다. 노동자라고 하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직장에서 일하지만 어쨌든 가지고 있는 생산수단이라고는 일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 일할 수 있는 능력만이 그들이 가진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용자(자본가)와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착취 당하게 된다. 즉, 이들의 노동은 자본주의의 원동력이자 성공의 척도인 이윤의 원천이 된다.

두 번째 근본적 특성은 경쟁이다. 마르크스는 자본가 계급이 싸우는 형제들과 같다고 했다. 하나의 집단으로서 자본가 계급은 노동계급에게서 이윤을 착복하지만 개별 자본가들은 그 이윤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자본가들과

경쟁한다. 주류 경제학 교과서는 바로 이 같은 경쟁적 투쟁이 효율성과 소득, 산출량을 증가시키는 원동력이라 말한다. 그러나 경쟁은 또한 뿌리깊은 불안정성의 원천으로서 자본주의 역사 내내 주기적으로 위기를 불러온 주범이기도 하다.

현재 위기가 발생하기까지

1990년대 이후 두 차례의 호황(2000년대 초의 짧은 침체기를 전후로 해서)이 있었는데, 둘 다 금융시장의 발전에 힘입은 바가 컸다. 1990년대 말에는 주식 시장을 중심으로, 2000년대 중반에는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거대한 투기적 거품이 일었다. 두 차례의 호황 모두 이 같은 거품에 크게 의존했다.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사람들은 예전보다 부유해진 듯한 느낌을 갖게 됐고, 더 쉽게 돈을 벌리고 쓸 수 있었다. 그럼에도 적어도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은 1950~60년대의 장기 호황 때보다 현저히 낮았다. 또한 이른바 호황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평균 생활수준이 정체하거나 하락했다는 점에서 1950~60년대와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마틴의 동료 기자인 에드워드 루스에 의하면 2001년에서 2006년 사이 미국에서는 중위 가계의 실질소득이 1.1퍼센트 하락했다. 이는 2천 달러에 해당하는 돈이다. 상위 1퍼센트의 실질가계 소득은 같은 기간에 2백3퍼센트 증가했다. 상위 0.1퍼센트의 경우 증가율은 4백25퍼센트였다. 달리 말해, 지난 15년 사이에 발생한 이른바 호황들은 금융 투기의 산물이었을 뿐 아니라 빈부격차 확대를 동반한 것이었다.

이번 위기가 터진 것은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투기 거품이 국제 금융 시스템의 대부분을 연루시킬 정도로 과잉 확장된 나머지 그것이 붕괴했을 때 단지 금융권만 파탄난 것이 아니라(그것만으로도 재앙적이었겠지만) 세계경제 자체가 파탄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기가 커지고 1930년대와 비슷한 대공황이 우려되자 정부가 구원투수로 나섰다. 규제금융의 규모가 얼마나 컸으면 우익인 니얼 퍼거슨(내가 알기로 그는 경제사가로서 《파이낸셜 타임즈》의 공동 편집자로도 일하고 있다)이 최근에 쓴 정치학 연구센터 책자에서 “우리는 국가독점자본주의 하에서 살고 있다”고 했을 정도다.

저들의 대책 — 노동자 공격

생각해 보니 이번 위기에서 살아남은 은행들은 정말로 국가의 후원 덕분에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그렇게 돈방석에 앉은 은행들은 이제 늘 하던 보너스 잔치를 벌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

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봐, 우리를 구제하느라 돈을 너무 많이 빌렸잖아. 나라 빛이 산더미처럼 불었어. 국가 재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운영해도 되는 거야? 재정 적자를 당장 줄여!” 그게 무슨 뜻일까? 공공 지출을 삭감하라는 말이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지난 몇 달 동안 공공 지출을 삭감하라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져 왔다. 유감스럽지만 마틴도 여기에 가세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공공 지출을 어떻게 삭감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영국 정치에서 핵심 쟁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임금 동결이다.” 물론 은행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임금 동결을 말하는 것이다. 또, “피고용자들도 공적 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복지 삭감도 필요하다” 하고 말했다.

하지만 이 모든 논의는 한 가지 수수께끼를 던져 준다. 공공부문 노동자들, 이를테면 교사, 소방관, 간호사, 우편부,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경제 위기에 어떤 책임이 있단 말인가? 이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옛날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 때문에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고 말하곤 했지만 이번 위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한다. 즉 공공부문 노동자들뿐 아니라 공공 서비스를 향유하는 일반인들 중 누구도 이번 위기에 대해 책임이 없다. 그런데 왜 혹자는 그들더러 대가를 치르라고 하는가?

그 답은 계급 권력과 관련 있다. 이번 위기는 은행들의 힘이 실로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 줬다. 은행들은 파산 지경에 내몰려 국가의 도움으로 생존하고 있을 때조차 경제 위기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정책을 국가에 요구할 정도로 강력한 대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것이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과 노동 간의 계급적대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인가?

위기의 원인은 또 어떤가? 이미 말했듯이 위기의 배경에 금융화라는 것이 있었다. 달리 말하면 금융 부문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 영국 금융 당국의 수장 조차 은행들이 덩치가 너무 크고 사회적 관점에서는 별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말할 정도다(그런데도 왜 은행이 아니라 공공 지출이 삭감되어야 하는 것인지 더욱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금융화 현상 자체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선진국 경제권은 1960년대 말부터 오랜 수익성 위기를 겪어 왔다. 이로 인해 체제가 붕괴하지는 않았지만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둔화했고 성장을 지속하기가 점차 어려워졌다. 그러다가 1990년대 말부터는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금융 부문의 팽창을 선택한 것 같다. 마르크스주의 경제사가인 로버트 브레너는 이를 자산 가격 케인스주의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절망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위)와 오늘날 역시 절망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아래) — 과연 자본주의는 “적응 발전” 하는가?

라고 묘사한 바 있다. 주가나 주택 가격 상승을 부채질함으로써 그러한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마음 놓고 돈을 빌려 쓰도록 부추기는 방식으로 유효수요를 창출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거품은 너무나 크게 부풀려졌던 나머지 그것이 터지는 순간 세계경제도 함께 붕괴하고 말았다.

자본주의에 대안은 있는가?

버락 오바마의 비서실장인 람 에마누엘은 진보적인 사람이 전혀 아니지만 좋은 말을 한마디 했다. “이런 위기는 그냥 흘러 보내기에는 너무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비록 미국의 협소한 정당 정치 논리를 바탕에 깔고 한 말이지만 그래도 좋은 말이다.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겪어 온 경제 질서와 이데올로기의 한계와 약점을 이토록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 주는 위기는 정말로 그냥 흘러 보내기에는 너무 좋은 기회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현 질서에 대한 대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려는 얘기도 대안에 관한 것인데, 이는 마틴의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일종의 선제 공격이기도 하다. 마틴은 아마도 “자본주의의 끝이 말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자본주의의 대안은 없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설사 그 말이 맞더라도 그것은 사실 궤변적인 주장이다. 심지어 마르크스가 생각한 것보다도 현실이 더 우울하다는 말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비록 끔찍한 체제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그것을 타도하고 더 나은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만약 자본주의의 대안이 없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단지 자본주의가 끔찍한 체제일 뿐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주장이 궤변적이라고 생각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소련과 동유럽의 스탈린주의 체제의 실패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온전히 작동하는 체제로 정착되기까지 5백년이 걸렸다. 그 사이에 온갖 시행착오와 불발로 끝난 혁명, 일본 전진과 일보 후퇴를 겪어야 했다. 자본주의가 그랬을진대, 자본주의의 대안을 건설하려는 제한

적이고 온갖 역사적 제약 때문에 실패로 끝난 단 한 번의 시도를 근거로 자본주의의 대안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습기 짝이 없다.

진정한 민주적 계획 경제

그러나 나는 자본주의의 대안을 대략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대안은 민주적 계획이다. 즉, 직장 과 지역 기반의 평의회로 조직된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지역 수준에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더 높은 수준에서 최대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자원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시스템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몇 년 전에 비해 ‘계획’을 기억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 것 같다. 앞으로 이 세상에는 계획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의 위협이 정말로 그렇게 심각하다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극적인 감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직면한 선택이 꼭 “시장 아니면 계획”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우리가 직면한 선택은 “어떤 종류의 계획이냐”는 것일지도 모른다. 중앙집중적이고 기업 주도로 이루어지는 계획인가(내 생각에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시도는 이런 형태를 띠 것이다), 아니면 이윤보다 인간의 필요가 우선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설되는, 진정한 민주적인 아래로부터의 계획인가?

정리하자면, 나는 자본주의의 미래에 관한 논쟁에 전혀 수세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는다. 마르크스주의자인 내가 보기에 지난 2년간의 사태 흐름은 마르크스가 1850년대와 1860년대에 《자본론》을 집필한 이후로 그의 후학들이 계승·발전시킨 자본주의 분석의 율바름을 확인시켜 줬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으로, 이번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에 대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웅변하기도 한다. 자본주의가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인류에게 미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009년 케냐 난민촌에서 굶주리는 어린 아이 — 경제 위기로 빈곤이 심화하면서 10억 명이 아사 위기에 놓여 있다.

“자본주의는 실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덜 나쁜 시스템이다.” (마틴 울프) vs “자본주의가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인류에게 미래는 없을 것” (알렉스 캘리니코스)



내 칼럼을 읽어 본 사람이라면 내가 항상 질문부터 던지면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내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에도 이런 위기가 있었는가? 둘째,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 셋째, 위기가 끝나고 있는가? 달리 말하면, 이번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 넷째, 재발 방지가 가능할까? 마지막으로, 이번 위기가 자본주의의 종말을 의미하는가? 다들 알겠지만 이에 대한 내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종말을 예견했지만 번번이 그들의 예측은 빗나갔다.

자본주의는 왜 망하지 않나?

먼저, 과거에도 이런 위기가 있었는가? 이와 관련해서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말을 상기해 볼 만하다. 그는 《설득의 경제학》(부글복스)에서 1930년대의 위기를 “발전기 고장”이라 묘사한 바 있다. 그 뜻인즉, 어떤 이유에서건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엔진에 결함이 생겼는데 그 결함을 찾아내서 고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었다. 케인스는 어떤 면에서는 공극의 반(反)마르크스주의자(그것도 매우 유능한)였다. 당시의 경제 위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케인스는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케인스의 《일반 이론》이 출판된 해인 1936년에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고 있었다면 아마 청중들 거의 대부분이 자본주의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대공황에 타격을 입지 않은 듯했던 유일한 경제권은 소련과 나치 독일 정도였다.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실업률이 노동인구의 4분의 1에 달할 지경이었다. 대부분의 경제가 공공부문 부채와 은행 파산 물결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이 모든 사실을 봤을 때 그 당시에 합리

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끝났다고 결론지었을 법하다. 하지만 그 생각은 틀린 것으로 입증됐다. 그렇다면 문제는 왜 그때 자본주의가 끝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바로 자본주의가 적응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역사상 적응력이 가장 뛰어난 체제다. 이는 부분적으로 자본주의가 경제·정치적으로 탈중앙화한 시스템으로서 유연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소비에트 체제는 어땠는가? 물론 스탈린주의의 사례가 진정한 사회주의적 이상과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 기억에 1950~60년대에는 서구 모델보다 월등히 우수한 모델로 널리 알려졌던 소비에트 체제는 결국 적응에 실패했다. 권력과 정보가 중앙집중화한 체제는 극도로 경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 가장 덜 나쁜 체제

이 대목에서 케인스의 사상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그가 ‘적응’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도 처방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는 총수요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경제 체제의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해결해 나가야 하며 그렇게 했을 때 시장 경제의 탈중앙화하고 경쟁적인 속성이 나머지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케인스는 생각했다. 따라서 이번 위기에 대한 나의 접근법은 분명 알렉스와 다르다. 나는 자유민주주의적 자본주의 정체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오늘날의 복잡한 경제와 사회를 운영하는 최상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자본주의는 실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덜 나쁜 시스템이다. 탈중앙화한 정보를 활용하는 경쟁적 시스템은 알렉스가 제시한 고도로 복잡한 투표 시스템보다 비할 데 없이 더 효율적이며, 인간의 불완전성을 오히려 생산적인 요소로 만든다. 물론 자본주의는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므로 절대 완벽하지 않다. 자본주의는 명시적으로 비(非)유토피아적인 체제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유토피아를 겪어 봤고, 더는 필요없다. 자본주의가 지금처럼 명백히 고장이 났을 때면 고장 난 특정 부분만 찾아내서 고치면 되는 것이다. 이번 위기가 대공황의 재판이 되지 않은 것도

바로 그 덕분이다. 이번 위기가 끝날 때쯤이면 전 세계 GDP가 처음에 비해 아마도 2~3퍼센트 수축돼 있을 터인데, 세계경제 규모가 2007년과 대략 비슷해져 있을 것이란 말이다. 이는 분명 상당한 충격이긴 하겠지만 파국을 논할 정도는 아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느냐는 것이다. 하이먼 민스키 교수가 말했듯이 금융위기는 탈중앙화한 시장 경제 체제의 고전적 특징이다. 그렇다면 금융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로 고전적인 도취감이 작용했다. 달리 말해, 전 세계의 의사결정권자들이 경기순환 종말론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에 사로잡혔다. 둘째, 알렉스가 이 점을 언급 안 한 것이 흥미로운데, 바로 동아시아 등지에 새로운 권력 중심들이 떠오르면서 자본주의에 어마어마한 구조적 격변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그 결과로 엄청난 금융 현상들이 나타났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동아시아 경제들이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축적하면서 나타난 글로벌 불균형 현상은 여러 결과를 초래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한동안 명목이자과 실질이지가 전에 없이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그 결과 투자자들은 더 높은 이자 수익원을 찾아 나서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배경에서 민스키가 “고전적 금융 혁신기”라고 부른 시기가 도래해 명목상 안전한 금융 상품들이 새로 등장했다. 그리고 거의 언제나 그렇듯 정부와 금융당국은 뻔한 실수들을 저질렀다. 주력 시장과 증권 시장에 대한 규제는 필요 이상으로 완화했다.

끝나 가는 위기

세 번째 질문. 이제 위기가 끝나 가고 있는가? 끝나 가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만 그렇다. 먼저 위기가 왜 끝나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자. 세계 각국 정부는 케인스의 이론을 배운 덕분인지 경제 위기가 닥치자 전후 역사상 가장 눈부신 공조를 취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재정 적자가 2007년의 평균 1퍼센트에서 2009년의 9퍼센트로 대폭 확대됐다. 단기 금리는 0퍼센트로 떨어졌고 경제적 파급력이 큰 기관들의 부채는 사회화됐다. 이는 역사상 가장 케인스주의적인 정책이었다. 그리고 이 정책은 효과

가 있었다. 경기 추락이 2분기 이상 지속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제가 안정화했고, 신용 시장이 극적으로 회복됐으며, 공산품 교역량의 급강하 추세가 반전되고 있다. 경제 성장을 전망치도 이제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어서 다음 한 해에 세계경제는 아마 우리도 깜짝 놀랄 만큼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솔직히 우리가 극복해야 할 끔직한 난제들이 남아 있는데, 특히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몇몇 고부채 국가에서 디레버리지 [부채 축소]가 필요하다. 많은 나라에서 민간 소비가 아직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고, 경기회복에 꼭 필요한 글로벌 불균형 해소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무엇보다 각국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가 남아 있다. 그래서 예컨대 영국 정부는 세수 3파운드당 4파운드를 지출한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 칼럼을 통해서 지적해 왔듯이,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세수를 3분의 1만큼 확대하자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도 완벽히 합리적인 대안이다. 그러나 나는 정치 논리상 세금 인상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따라서 궁극적으로 현재의 구조적 재정적자(현재 재정적자의 적어도 일부분은 분명 구조적이다)를 해소하려면 지출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대안 — 점진적 사회공학

넷째,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한가? 솔직히 불가능하다. 오늘날의 시장 경제는 수십억 단위의 인간과 재화를 공시적이고 무엇보다 통시적으로 상호 조율하는 복잡한 시스템이다. 이런 시스템이 때때로 고장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금융 시스템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두려움(예컨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에 주력 용자를 받는 사람들의 기대)을 반영하는 시스템으로서 본질상 불안정하며 때때로 고장 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위기 직전처럼 도취감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금융 시스템이 고장 날 개연성이 높다. 사실이 정도 규모의 위기는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근 8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금융 시장 참가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위기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도 않은 것 같다.

금융 시장을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탈중앙화한 시장경제는 어떤 것이든지 다 그렇다. 그러나 이번 위기의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할 것임은 분명하다. 특히 자산 가격 거품에 대응해 훨씬 더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써야 할 것이다. 또한 ‘대마불사’로 여겨지는 핵심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자기자본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할 것이다. 내 생각에 이는 금융 시장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시장경제 같은 고도로 복잡한 시스템을 다룰 때는 바로 이런 종류의 점진적 사회 공학을 적용하는 것만이 올바른 길이라고 확신한다.

자본주의에 돈을 걸어라!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자. 이번 위기가 자본주의의 종말을 의미하는가? 정말 미안하게도 내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역사상 가장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경제 시스템이라는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그럴 수 있는 건 그것이 수익, 수십억 명의 독자적 활동을 상호 조율하며 그러한 활동에 의해 지탱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설령 [서구에 사는] 우리가 자본주의를 포기하고 싶더라도 인도와 중국으로 하여금 시장경제라는 실험(매우 통제된 실험이긴 하지만)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란 절대 불가능할 것이다. 1980년 이후 중국의 1인당 GDP는 10배 성장했고 인도는 4배 성장했다. 이들이 무슨 잠꼬대 같은 대안을 믿고 자본주의를 포기하겠는가? 따라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의문은 자본주의를 폐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과연 어떤 종류의 자본주의가 필요하느냐는 것이다. 오직 하나의 단순한 자본주의 모델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기보다는 다양한 모델들이 공존하게 될 듯하다.

어쨌든 나의 기본 요지는 간단하다. 자본주의는 때때로 실패하지만 언제나 살아 남는다. 자본주의에 돈을 걸어라!

▶ 12면으로 이어짐

이명박의 저출산 ‘대책’

쓸모없거나 여성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최미진 기자 | lionlady@left21.com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22명까지 떨어지자, 정부는 “국가적 준 비상사태”라며 호들갑을 떨고 이명박이 직접 나서서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반응은 냉담하다. 정부가 내놓은 것들은 아이 하나 낳아 키우기도 힘든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줬을 뿐이다.

한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나라 24~39세 남녀 중 71퍼센트가 아이를 2명 이상 낳고 싶어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 특히 결혼 이후 경제적 부담의 체감도가 더 높았다.

정부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하지만, 말만 요란하다. ‘4대강 삼정’과 부자 감세를 위해 희생된 예산 목록에는 여성 일자리·보육 예산도 포함돼 있다. 전체의 5.5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관련 예산을 깎아 버렸고, 소득하위 60퍼센트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고더니 이것도 사라졌다.

‘강부자’ 이명박이야 자식 4명 키우는 게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여성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70퍼센트에 달할 정도로 미래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임신하면 일자리를 잃을까 불안감에 떨어야 하고, 아이를 열악한 보육시설에 맡기고 뒤돌아 서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나쁜 엄마’로 남아야 할지 직장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를 더 낳겠는가.

유아기 보육만 문제가 아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지옥의 입시 레이스,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과 대학 등록금 … 한 명 더 낳을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한 살 앞당기자는 제안이 황당한 까닭이다.

낙태 방지 정책을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것도 문제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임신한 여성을 추책해 10개월 후 출산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하는 ‘임신 이력추적제’ 안이 나왔다는 흉흉한 소문도 들린다. 이



하나 키우기도 팍팍한데 둘셋 낳아야 지원한다며 염장 지르는 정부

는 “여성을 자신의 몸에 대한 재산권자의 주체로 존중하지 않고 국가 발전을 위한 출산의 도구로 전락시켜 여성의 자율권을 통제하려는 반인권적인 관점”이며, “[육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여성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일 뿐이다”(11월 26일 진보·여성 단체들이 발표한 공동 성명서).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며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을 서슴지 않고,

제3세계 출신 결혼 이주 여성의 국적 취득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정부가 ‘노동력 부족’을 걱정하는 것도 모순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조건에서는 낳는 아이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가 크게 역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프랑스나 북유럽 복지국가들에서 출산율이 어느정도 증가한 것은 육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무

상교육, 사회안전망 덕분일 것이다. 이 나라들에서는 30대 초반 여성들의 경력단절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선진화” 운운하는 이명박은 “선진국이 어떻게 했다고는 하지만 … [한국에서] 그대로 될 수만은 없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지원에 이토록 인색한 정부가 내세우는 ‘저출산’ 대책은 사람들의 가슴에 염장만 지를 뿐이다.

저출산이 ‘문제’인가?

이명박은 저출산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지만, 과연 그런가. 이명박의 ‘저출산 대책’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 일부도 이런 대전제는 공유하는 듯하다. 물론 조건도 마련해 주지 않고 낳으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지만, 국가의 인구정책에 여성의 출산을 끼워 맞추려는 발상 자체도 문제다.

한국 정부는 언제는 “뒹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며 낙태와 정관수술을 강권하더니 이제는 더 낳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고 낙태하는 여성을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

권 존중과는 거리가 멀다.

1960년대 이후로 피임기구가 보편적으로 공급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면서 출산율도 떨어져 왔다. 이처럼 여성들이 어느 정도 스스로 임신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은 ‘문제’적 현상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진전된 조건이다. 또, 아이를 낳든 낳지 않든 상관없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인구수는 사회적 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밖에 없다. 진정한 문제는 인구수 자체가 아니라, 사회의 조직 방식이다. 뿔서스가 인구의 기하

급수적 증가로 인류가 망할 것이라는 과대망상적 예측을 했을 때나 지금이나, 세계 곳곳에는 일하고 싶지만 실업자 신세인 사람들이 넘쳐난다.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남아 돌지만 빈곤 인구는 증가하는 모순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인구는 당분간 줄어들지 몰라도 세계 평균 출산율은 2.67명으로 세계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국경을 세계 노동자들에게 개방해 진정한 ‘다문화주의’를 실현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애 많이 낳으라고 욕박지르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대안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VS 마틴 울프 논쟁 정리 발언

» 11면에서 이어짐

마틴:

[알렉스는] 전 세계적 수준에서 투표를 통해 생산을 조율하는 것이 쉬운 일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하지만 내 생각에 이는 몽상이다. 수익 단위에 이르는 사람들의 소비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일일이 투표로 결정한다 말인가?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계획에 대한 하이에크의 비판은 타당하다. 중앙의 어떤 기구가 경제 활동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무수히 많은 정보를 감당하기란 불가능하다.

자본주의 체제가 우수한 점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 준다는 점에 있다. 시장경제의 동기 부여야말로 [중국, 인도 등지의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는 원동력이다. 몇 세대가 지나면 현재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우리와 비슷한 생활수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어떤 문제도 최종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문제를 끊임없이 고쳐 나감으로써 이번 위기와 같은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 그런 노력은 효과가 있다. 내가 제안한 조처들이 취해지고 나면 다음번 위기는 70~80년 뒤에나 도래할 것이라 믿는다. 지난번에 이런 위기가 도래했던 것이 70~80년 전이었다.

알렉스:

먼저 케인스에 관해서 한마디 해야겠다. 케인스가 반(反)마르크스주의자였다는 것은 맞지만, 그가 어떤 점에서는 반(反)자본주의자이기도 했다는 점을 마틴은 간과하고 있다. 민스키도 흥미로운 경제학자이지만 케인스는 민스키보다도 더 급진적이다. 민스키는 자본주의 하에서 금융 시장이라는 카지노의 존재가 불가피하다고 믿는다. 카지노가 주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긴 하지만 그때마다 문제를 고치면 그만이라는, 마틴과 비슷한 관점이다. 반면 케인스는 카지노를 아예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를 사회화하자는 주장도 했다. 이는 자원 배분에 관한 중요한 결정권을 민간 부문으로부터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는, 대단히 급진적인 관점이다. 그런 점에서 각국 정부는 요 근래 자신들이 취하고 있는 경제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케인스를 너무 제멋대로 원용하는 것 같다. 또한 지금 일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러한 정책의 결과로 다음번 위기가 70~80년씩이나 유예될 것 같지도 않다.

동기부여에 관해서도 한마디 하겠다. 오직 돈을 위한 욕심만이 인류가 성취한 모든 진보와 발명의 원동력이라는 생각에 나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오늘 이 행사 자체가 그에 대한 절묘한 반박이다.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는 무수히 많다. 시기심처럼 안 좋은 동기도 있겠지만 호기심이나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 혹은 단순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등이 획기적으로 진보하는 것은 종종 그런 동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체적과 당근이 없다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은 정말 어리석다. 시장주의라는 전제를 받아 들일 때 사람의 시야가 얼마나 보수적이게 될 수 있는지를 마틴이 몸소 보여 주는 것 같다.

이제 계획의 문제로 넘어가자. 계획에 대한 하이에크의 비판은 경제에 관한 모든 정보가 한 곳에 집중되는 계획 모델을 전제로 삼는다. 실제로 그런 종류의 계획은 불가능하다. 그 점에서는 하이에크가 옳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와 의사결정이 분권화해 있는, 다른 종류의 계획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국가적 또는 국제적 수준에서 기본적인 방향이나 우선순위만 합의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재화의 생산과 분배에 관한 대부분의 결정이 지역 수준에서 취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마치 “탈중앙화하고 정보를 다루는 역량이 뛰어난” 자본주의 아니면 “고도로 중앙집중화한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본주의는 갈수록 중앙집중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번 위기에서 드러났듯이 정보를 다루는데 있어서 재앙적일 정도로 비효율적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의 종말이 필연적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나는 단 한 번도 이번 위기가 자본주의의 종말을 뜻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바보가 아니고선 그런 말을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인류에게 보내진 경고이기는 하다. 우리 삶의 방식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경고 말이다. 그 경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우리의 선택이다.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사회포럼, 대학 마르크스주의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사회포럼

서울 동부 사회포럼

12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 기념 — 우리는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해야 하는가?

연사: 이정원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
일시: 12월 9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건국대학교 수의대 307호

참가비: 3천 원
연락처: 02-447-0397, 010-8439-0502

서울 중북부 사회포럼

한국의 인종차별과 다문화주의

연사: 이정원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
일시: 12월 10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대학로 한성대 에듀센터 807호 (해화역 4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CGV 옆)

참가비: 2천 원
연락처: 070-8113-8541, 010-3362-1968

서울 남부 사회포럼

코펜하겐 기후회의 — 기후변화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연사: 장호중 <레프트21> 기자
일시: 12월 10일 (목) 오후 8시
장소: 원스터디 (강남역 2번 출구)
참가비: 4천 원
연락처: 02-416-0963, 010-5784-3175

서울 동부 사회포럼

신자유주의의 위기인가? 자본주의의 위기인가? —

오늘의 경제 위기 성격과 대안

연사: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이정구 (경성대학교 연구교수)
일시: 12월 23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여성능력개발원 3층 1회의실 (건대입구역 6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연락처: 02-447-0397, 010-8439-0502

강원 사회포럼

코펜하겐 기후회의 — 기후변화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연사: 김중환 (연세대학교 지구환경연구소 연구원)
일시: 12월 16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강원대학교 생활도서관
참가비: 없음
문의: 010-9805-1050

서울 서부 사회포럼

코펜하겐 기후회의 이후 — 재앙적인 기후변화,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연사: 장호중 <레프트21> 기자
일시: 12월 17일 (목) 오후 8시
장소: 신촌 아트레온 토즈 (신촌 지하철역 4번 출구)

참가비: 4천 원
연락처: 02-324-3400, 010-7214-1157

대전·충남 사회포럼

진보 진영은 왜 베를린 장벽 붕괴를 환영해야 하는가?

연사: 전지윤 <레프트21> 기자
일시: 12월 23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대전시민아카데미 (사창역 2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연락처: 010-4743-6790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

부산

오바마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한국군 재파병

연사: 김덕영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 사회단체연석회의 기획팀장)
일시: 12월 22일 (화) 오후 6시
장소: 부산대학교 (강의실 추후공지)
참가비: 없음
연락처: 010-8367-1710

교원평가제에 대한 송재혁 교사의 입장을 지지하며

전교조 활동가 송재혁 교사의 글이 <레프트21> 19호에 실리기 전까지 교원평가제에 대한 <레프트21>의 입장은 애매했습니다. 교원평가제를 내세운 정부의 공세에 반대하면서도, ‘교사도 평가(물론 학생들의 평가를 말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함으로써 무언가 회색 지대에서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물론 <레프트21>의 전반적인 논조는 노동계급의 투쟁을 강조하는 선홍색鮮紅色입니다. 그러나 유독 교원평가제 문제에서만 큰 선명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카드를 뒤섞었기 때문입니다. 즉, 교원평가제는 교사에 대한 정부의 공세인 반면, 학생의 교사 평가는 민주주의적 요구로, 둘을 대등한 반열에 올려놓고 전술을 강구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정부의 공세를 막아야 합니다. 교사의 조건을 지키

기 위해서일 뿐 아니라 학생 간 경쟁 강화를 막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민주적 교사 평가는 경쟁을 반대하고 우애와 유대를 강조하는 학생들의 자주적 활동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야 비로소 의제에 올라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자본주의적 소외와 성적·입시 경쟁으로 학생의 사기가 낮고 자주적 활동이 미흡할 때 학생에 의한 교사 평가가 시행된다면 교육의 진정한 이상보다는 입시 위주 교육에 영합하는 교사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레프트21>은 학생의 민주적 참여력을 무시하는 일부 교사들의 천박한 노동자주의적 견해를 의식해 애써 학생 측의 교사 평가 필요성을 강조한 듯합니다. 하지만 균형 감각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정부와 그 복마

전의 교육 관료, 부패한 사학재단 등이 추상적으로는 옳은(단지 추상적으로만 옳을 뿐인) 민주적 교사 평가 사상을 악용해 교사들을 공격하려 하고, 전교조 내 온건파 교위 상근간부들이 이에 실용주의적으로 타협하려 할 때, <레프트21> 같은 선명좌파 언론이 문제의 주된 측면과 부차적 측면을 분별하지 못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추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마치 서방의 제국주의적 전쟁을 반대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전쟁에도 반대하고 테러리즘(제국주의에 억압당하는 측의 일부 극소수만이 지지하는 전술에 불과한)에도 반대한다는 ‘공평무사’ 양비론의 입장을 내놓아서 안 되는 것과 일부 유사합니다. 테러리즘 반대론은 전술 차원이 아니라 선전 차원에서(흔히 신문 한쪽 면 교육용 칼럼이

나 소책자 형태로) 다룰 문제입니다. 또, 팔레스타인 연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의 해방은 오직 ‘세속적 민주팔레스타인’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할 때 자칫 하마스 같은 종교적 저항세력이 백안시당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하는 것과도 일부 비슷합니다. 급진 이슬람주의의 한계 문제는 선전 차원에서 다뤄야 적절한 것입니다.

선명 좌파는 교원평가제 문제에 직면해, 정부의 공세를 저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교사와 학생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라는 이상은 학생과 교사의 다수가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실제로 가능한 일로 여기는 상황, 즉 매우 높은 수준의 급진화가 사회적으로 진행될 때 제출되는 것이 적절한, 선전 차원의 이슈인 것입니다.

최일봉 다함께 운영위원

중앙대 교지 강제 수거 사건

학생들의 항의로 교지를 돌려받다

지난 25일 중앙대학교 교지 <중앙문화> 58호가 배포된 지 3시간 만에 학교 본부에 의해 강제 수거되는 일이 있었다. 학교가 밝힌 강제 수거 이유는 ‘기업은 대학을 어떻게 접수했나’라는 글을 담당 교수가 사전 검토하지 않았고, 이것이 학교 본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총장과 회의한 후 “총장님을 조롱한 내용이 포함된 만화를 게재”했다는 이유가 추가됐다.

<중앙문화> 편집위원들은 즉각 강제 수거에 항의하는 성명을 내고 학내 곳곳에 대자보를 부착했다. 학생들도 학교 웹사이트에 항의글을 올렸다. 학교 측의 강제 수거 사태로 <중앙문화>의 인기는 오히려 치솟았다.

올해 여름방학부터 두산재단과 학교 당국은 교지를 학생자치기구

에서 학교 본부의 언론매체부 소속으로 바꿨고, <중앙문화>와 <녹지>(여성주의 교지) 통폐합을 시도했다. 진중권 교수 재임용에 항의한 학생들에 대한 징계 위협과 교지 강제 수거 사태는 내년에 있을 학내 구조조정과 등록금 인상에 앞서 학내 언론과 학생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다행히 학생들의 비판 여론에 압력을 받은 학교 당국은 교지를 다시 배포할 수밖에 없었다. ‘대학생다함께 중앙대모임’, ‘언론 공공성을 위한 대학생연대’와 학내 언론 6사가 학교 본부의 강제 수거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 힘을 보탰다. 현재 교지 편집위원들과 중앙대 학생들은 학교 측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신동익

“전략”과 “전술”이라는 용어가 너무 내향적으로 쓰이고 있다

저는 “전략”과 “전술”이라는 용어가 <레프트21>만의 내향적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좌파들이 전략과 전술을 구분하지 않거나 개념이 부재하다고 그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전략과 전술이 어떻게 다른지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전략적’ 반MB연합을 맺는 것을 비판하고, ‘전술적’인 수준으로만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들에게는 공(空)개념으로 여겨질 전략과 전술이라는 단어의 차이를 힘주어 말한들, 잘해 봐야 단지 “정도의 차이” 정도로만 여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레프트21> 18호 기사 ‘왜 반MB연합이 아니라 진보대연합이 필요한가’에서 전략과 전

술이 어떤 기준으로 칼같이 구분되는지 1백 퍼센트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좌파들이 전략적 반MB연합을 맺는다는 것은 연립정권을 만들려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삼간다는 것인가? 관련 글에서는 재보선 ‘전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전략은 이 글의 전략과 같은 뜻인가? 각각의 문장에서 쓰이는 ‘전략’과 ‘전술’이라는 단어들이 각각 어떤 ‘전쟁’과 ‘전투’를 상징하고서 나온 말들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전략과 전술이라는 은유를 쓰기 보다는 조금 더 길어지더라도 원래 하려 했던 말을 풀어서 쓰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김중환

아시아에서 미국 패권의 한계만 배타적으로 강조해서는 안 돼

오바마 시대 미국 제국주의가 아시아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지적한 <레프트21> 19호 ‘미국 패권의 한계를 보여 준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 기사는 매우 유용했다. 나는 미국이 중동 전쟁 실패로 다른 지역 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시아에서 열강 간 경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이 글의 논조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누구도 ... 미국의 개

입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였다”는 문구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문제는 “누구도”가 누구를 지칭하느냐다. 만약 중국, 일본, 러시아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조건부(특히 일본의 경우엔 매우 강한 조건 — 일본이 지금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벗어나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하긴 이르다 — 을 달아)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번 글의 화두가 됐던 오바마가 접촉한 온갖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예컨대, 최근 싱가포르 전 총리이자 여전한 마후 실력자인 리명후이는 “요즘 중국이 너무 설치고 있다. 미국이 나서서 뭔가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사실 중국에 인접한 상당수 나라들의 공통된 정서를 표현한 것이다.

상당수의 타이완 엘리트들은 중국에 일방적으로 흡수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지배자들은 중국이 남중국해를 통제해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해상 무역 통로가 볼모로 잡히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예컨대, 베트남은 중국과 분쟁 중인 서사 군도 석유 개발에 미국 석유회사를 끌어들었고, 필리핀도 중국과 분쟁 중인 난사 군도

를 필리핀 영토로 규정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미국과 군사 협력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이 여전히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구실을 하기를 바란다. 이들이 중국과 미국의 전쟁을 바라고 의도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크고 작은 ‘도발’은 미래에 강대국 간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다.

나의 주장은 앞으로 이 지역에서 강대국 간 갈등이 더 격해질 수 있다는 정병호 기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보충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주로 아시아에서 미국 패권의 한계를 배타적으로 강조한 정병호 기자의 논조와는 약간 차이가 있기도 하다.

김용욱

진보대연합, 서너 가지 핵심 의제를 기준으로 구성해야

<레프트21> 19호 ‘진보대연합 — 왜 필요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기사에서 필자는 “진보진영이 합의할 수 있는 10~20가지 정도의 강령을 둘러싸고 공동선적 방식으로 진보대연합을 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했다.

2007년 대선 당시 “다함께는

반전·반신자유주의·반주류정치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맞붙〉42호)했다. 2007년 다함께가 제안했던 선거연합과 지금의 진보대연합이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2007년 [〈맞붙〉이 제시한] 선거연합과 비교할 때 이번 <레프트21>은 상대적으로

많은 요구들을 구체적인 ‘강령’으로 제시했다는 것이 눈에 띈다. 기사에서는 “진보진영이 합의할 수” 있는 강령이라고 했지만, 막상 진보대연합의 강령을 합의하려면 단체들의 상이한 입장차가 표출돼 난항과 진통을 겪으며 진보대연합 구성에 다소 시간이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강령을 합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사에서도 강조한 바 있는) “반신자유주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 반대, 민주주의 후퇴 반대, 파병 반대”라는 포괄적이면서도 진보적인 서너 가지 핵심의제만을 진보대연합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그 기준에 걸맞은 단체들이 진보대연합을 구성한 후, 그

안에서 논의를 통해 선거강령을 만들어 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또, <레프트21>이 미리 누군가가 제안한 강령(반MB공투본의 ‘12대 요구’나 <레프트21>과 다함께가 제시하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주요 요구들’ 등)을 둘러싸고 진보대연합의 강령을 논의하

자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또, 강령을 통일한다면 진보대연합 소속 단체들이 “독립적인 주장과 비판의 자유를 보장”받기 보다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행동 통일”해야 한다는 압력을 더 강하게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

이명하



2009년 이란 항쟁 이해의 길잡이가 될 책들

이란에 관한 두 권의 훌륭한 책 —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호메이니》(이하 《호메이니》), 《이란의 여성, 노동자, 이슬람주의》(이하 《여성 노동자》)) — 이 나왔다. 아마도 2009년 이란 민중의 위대한 항쟁이 이란에 대한 관심을 높였기 때문 이리라.

올 6월 이란에서 부정 선거 의혹에 항의하는 대규모 가두시위가 터져 나왔을 때 국내의 좌파들은 우익 정부에 맞선 이 항쟁을 쌍수를 들고 환영한 집단과 시위대의 뒤에 미국의 비밀공작이 있다고 믿은 집단으로 분열했다. 나는 전자의 관점에서 거리에서 용맹하게 투쟁한 평범한 이란인들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두 입장 뒤에는 사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상이한 관점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논쟁은 누구의 주장이 이란의 사회·정치·역사적 현실과 더 잘 들어맞느냐에 관한 것이기도 했다.

이 두 책은 내 입장을 뒷받침하는 귀중한 증거들로 가득하다(나는 이 책들을 읽으면서 환호성을 질렀다). 더구나, 이 책들은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자 도저히 친미·우익적 관점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쓴 것이다.

유달승은 한국 최초의 이란 유학생이자 〈한겨레〉에 ‘유달승의 중동이야기’라는 칼럼을 연재하면서 진보적 관점에서 복잡한 중동 문제를 평이하게 해설해주는 발군의 역량을 보여 왔고, 최근에는 오바마의 아프가니스탄 증파를 강하게 비판했다.

포아는 이란의 전투적 활동가 출신으로, 과거 파리 망명 중이던 호메이니를 면담했고(이 장면은 책에 묘사돼 있다), 1978~79년 이란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가했으며, 최근에는 영국에서 이란 사회를 연구하면서 반전 단체인 전쟁저지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다.

두 책은 성격과 초점이 다르며, 정치적 변화와 사회경제적 변화를 상호 보충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호메이니》는 호메이니의 일생을 통해 본 20세기 이란 정치사다. 반면에 《여성 노동자》는 20세



2009년 6월 이란 항쟁 당시 시위대 선두에 선 색안경을 낀 여성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호메이니》

유달승 지음, 한겨레, 304쪽, 1만 3천 원

《이란의 여성, 노동자, 이슬람주의》

마르얌 포아 지음, 정종수·차승일 옮김, 책갈피, 272쪽, 1만 2천 원

기, 특히 이란 혁명 이후 이란의 사회적 변화, 특히 이란 여성의 삶의 변화를 마르크스주의 시각에서 추적했다.

《호메이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낮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복잡한 이란 정치사를 쉽고 평이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주류 언론의 편견에 찬 보도에 익숙한 한국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점들 — 예컨대 “이란은 아랍이 아니다”라는 아주 기초적 사실부터 — 을 그

때때 정리해 주는 ‘센스’를 발휘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최근 이란 항쟁이 서방의 지원을 받은 친서방 부유층이 주도했다는 주장이 알고 보면 얼마나 알팍한 지식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보여 주는 것이다. 예컨대, 이란 항쟁에 반대한 일부 좌파들은 참가자들이 주로 상층계급이라는 근거로 색안경을 포함한 그들의 치장을 지적했다. 즉, 차도르를 쓴 ‘하층’ 여성들이 아니란 것이다. 그러나 유달승은 그런 주장을 자신의 경험을 들어 쉽게 반박한다. 이란에서는 자외선이 강해 누구나 색안경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도 이란에 처음 갔을 때 빨리 색안경을 구입하라는 조언을 들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 책에는 석유가 이란-미국 관계에 미친 영향, 미국의 대중동 정책, 이란 혁명에서 호메이니가 좌파들을 척결하는 과정 등 이란 정치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묵직한’ 얘기들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란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란 혁명의 배경이 된 계급적 동력 — 예컨대, 호메이니와 경쟁 혹은 협력한 좌파 세력들의 정치와 혁명기 ‘쇼라’라는 기

층 노동자 조직으로 활짝 핀 전투적 이란 노동자 운동 — 에 대한 분석이 간단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책이 〈한겨레〉에 연재됐던 짧은 글들을 모은 입문서의 성격을 가진 점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약점이다. 동시에 아마도 저자가 호메니이에 대한 그동안의 왜곡된 논의들을 의식한 탓인지 호메이니의 모순과 약점에 대한 지적이 때때로 날카롭지 않거나 별다른 논평 없이 나열되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호메이니의 모순

반면에, 《여성 노동자》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여성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변화를 깊이 있게 분석하면서 호메이니와 그가 탄생시킨 새로운 이란 국가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다.

포아는 주류 언론들과 달리 혁명 이후 이란 사회와 여성의 처지 변화를 이데올로기(이른바 ‘이슬람 근본주의’)로 환원하지 않는다. 그는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지만 이란 사회와 여성 처지의 변화가 다양한 요소들 — 이슬람주의 이데올로기, 승리한 운동에 참가한 대중의 자신감과 기대, 상인을 포함한 호메

이니의 보수적 지지층의 압력, 국제 제국주의와 시장의 압력 — 이 상호 작용한 결과임을 지적한다. 그래서 그는 혁명 후 새로운 이란 국가가 온갖 모순된 방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한다.

이것의 대표적 사례로, 새 정부는 사 시대 시작된 불완전한 여성권 개혁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 종종 이것은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의 얼굴에 황산을 끼얹는 대단히 야만적인 형태를 띠었다 —, 다른 한편으로 광범한 농촌 여성들에게 생애 최초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었다.

더 중요한 것은 포아가 이란 사회를 변화시킨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도 국내외의 자본주의적 경쟁 압력이 새 정부의 행동에 족쇄를 채우는 구실을 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 준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만들었지만 이슬람주의 이데올로기로 정당화한 저임금 체제를 강요했다.

포아는 자본주의의 압력 때문에 발생한 이슬람주의 국가의 온갖 미사여구와 현실 정책 간 격차가 여성 운동을 포함해 다양한 투쟁을 낳은 가장 중요한 동력 중 하나였음을 지적한다. 그 결과 왜 흔히 정부의 이데올로기적 틀 내에서 시작된 운동이 성장하면서 결국 정부와 충돌하는 길로 가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단지 여성 운동에만 해당하는 특성이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란 항쟁 당시 일부 국제 좌파가 아흐마디네자드의 이데올로기와 모순적 ‘서민 정책’을 근거로 이란 민중이 정부에 도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 얼마나 단편적인가를 잘 보여 준다.

물론, 포아의 분석에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주요한 분석 틀의 하나로 ‘가부장제’를 사용한 것은 마르크스주의적 틀과 긴장을 빚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이란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이 두 책의 출간으로 한국 진보진영에서 2009년 이란 항쟁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용욱 기자 | ohatonge@left21.com



영화평 〈엘라의 계곡〉 감독: 폴 해기스

‘테러와의 전쟁’을 비판한 최고의 영화

이라크에서 이제 막 돌아온 병사 마이클 디어필드는 부대 근처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다. 그의 아버지 헥스(토미 리 존스)는 보안관 에밀리(사블리즈 테론)의 도움을 얻어 아들이 어떻게, 왜 죽게 됐는지 밝히려 나선다.

《엘라의 계곡》은 실화에 기초한 영화다. 초반에 이 영화를 반전 영화가 아니라 미스터리 수사물로 오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엘라의 계곡》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훌륭하다. 이 영화는 쉬운 길을 따라 가지 않는다. 이 영화는 전쟁의 다양한 측면을 꼬집어 내 우리에게 직시하도록 요구한다. 예컨대, 이 영화에서 묘사된 전쟁터는 흑백 논리로 손쉽게 제단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뉴스에서 드물게 병사들의 만행 소식이 나올 때 주류 언론들은 전쟁의 정당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을 찾으려 애쓴다. 이 영화와 달리 주류 언론

들은 자국의 ‘국적’을 위해 무고한 사람을 죽일 것을 명령받은 가난한 집안 출신의 병사들이 동료가 산산조각이 나서 죽는 것을 볼 때 어떤 기분일지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엘라의 계곡》은 단지 정치적으로 훌륭해 좋은 영화가 아니다. 이 영화는 그 자체로 대단히 훌륭하다.

먼저, 배우들의 연기가 훌륭하다. 토미 리 존스는 자신이 군대에 보낸 두 아들이 모두 죽은 후 죄의식에 짓눌려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아버지 역할을 탁월하게 소화했다. 그는 자신의 죄의식이나 전쟁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지루한 독백 없이 얼굴 표정, 동작과 침묵으로 보여 준다.

죄의식

이 영화를 돋보이게 하는 또 다른 특징은 영화가 진행되면서 화면의 질감이 변하는 것이다. 점점 이야기가 미국

에 빠져 들면서 화면의 질감도 거칠어진다. 영화의 도입부에서 너무나 명백해 보였던 것들이 더는 그렇지 않게 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면서 카메라 구도도 경직되고 협소한 구도에서 좀더 트여 있고 유연한 구도로 바뀐다.

감독 폴 해기스는 9·11 사건 후 애국주의가 판을 칠 때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다. 그는 그런 분위기에 도전하고 싶었다.

이 영화는 미국에서 별로 돈을 벌지 못했다. 그러나 해기스는 영화가 “자식들을 이라크 전쟁에 가장 많이 보낸 가난한 가정들이 밀집된 미국의 중서부와 남부에서 호응을 얻은 것”에 만족했다.

이 영화는 의심의 여지없이 ‘테러와의 전쟁’ 후 나온 최고의 반전 영화다. 상영이 끝나기 전 최대한 많은 사람을 모아 보려 가시라!



영화평 〈웰컴〉 감독: 필립 리오레

이주민을 ‘웰컴’ 하게 된 사람의 이야기

《웰컴》은 매우 시의적절한 영화다. 이 영화에는 전 세계 정부가 이주민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다.

《웰컴》은 비탈이라는 한 쿠르드계 이라크 청년의 얘기다. 그는 얼마 전 영국으로 이주한 이라크인 여자친구를 찾아 4천 킬로미터를 걸어 프랑스 항구 도시 칼레까지 왔다. 도버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가려는 비탈은 프랑스 정부가 이주민 캠프를 폐쇄한 뒤 칼레 거리를 배회하다 후미진 곳에서 잠을 청하는 이주민들을 만난다.

비탈은 5백 유로를 내면 트럭에 숨어 영국에 밀입국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고, 이라크인 친구들과 함께 이 방법을 시도한다. 비탈과 그 친구들이 탄 트럭이 프랑스 세관에 이르자 그들은 머리에 비닐 봉지를 뒤집어 써야 했다. 경찰이 이주민들을 잡으려고 이산화탄소 감지 장치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탈은 숨을 참지 못했고 경찰에게 잡혀 다시 칼레로 쫓겨난다.

칼레 해변을 걷다 문득 도버해협을 헤엄쳐 건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떠오른 비탈은 수영을 배우기로 결심한다. 수영 코치 사이먼은 불행 많고 이기적인 사람이지만 결국 비탈을 돕기로 한다. 사이먼이 이런 결심을 한 것은 별거 중인 부인과 재결합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의 부인은 교사이자 이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자선단체의 자원 활동가다.

바로 여기가 《웰컴》의 풍부함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사이먼이 비탈을 도우면 도울수록 그는 점점 경찰과 갈등을 빚게 된다. 이주민 캠프를 폐쇄하고 이주민 수용을 거부한 프랑스 정부와 대조적으로, 프랑스의 평범한 사람들은 불법 신분인 이주민들을 도우려다 경찰에게 괴롭힘과 구속을 당했다.

필립 리오레의 《웰컴》은 이주 문제를 훌륭히 다뤘을 뿐 아니라 사랑이나 무관심 같은 소재를 주제와 적절히 배합했다는 점에서 아주 인상적인 영화다.

박상표 칼럼

유전자조작 기업 몬산토의 감춰진 얼굴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식구들이 웅기종기 밥상에 둘러앉아 화기에애 하게 대화를 나누기엔 세상은 너무 바빠 돌아간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바쁜 일상 속에서 아침에 먹은 우유 한 잔, 토마토 주스 한 잔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져 밥상까지 올라왔는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다. 그 틈을 비집고 유전자조작식품(GMO)이 우리의 밥상을 점령해 버렸다. GMO는 두유, 마가린, 마요네즈, 팝콘, 케첩, 시리얼, 토마토주스, 옥수수콘 스낵, 콩, 콩나물, 콩기름, 캐놀라유, 알팔파, 파파야, 호박 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고 있다.

미국에서 수입한 옥수수나 콩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은 거의 1백 퍼센트 가깝게 GMO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2008년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옥수수의 85퍼센트, 콩의 95퍼센트, 면화의 87퍼센트가 유전자조작 종자를 파종하여 수확한 것이다. 최근에는 중국도 유전자조작 재배 면적을 슬금슬금 늘려 가고 있는 중이다.

앞에 열거한 목록에 자신이 즐겨 먹는 음식이 없다고 안심하는 사람들에게 ‘독한 말’을 한마디 해 둔다. “당신이 맛있게 먹었던 대부분의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는 유전자조작 작물을 원료로 만든 사료를 먹여 생산했을 걸!” 그래도 우유와 아이스크림은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도 환상을 모두 깨주겠다. “그 우유와 아이스크림은 유전자조작 기법으로 생산한 성장호르몬을 투여한 젖소에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거든!”

세계 최대의 유전자조작 기업 몬산토가 판매하는 성장호르몬 파실락을 투여한 소는 유선염, 생식능력저하, 난소낭종, 자궁장애 등 22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성장호르몬을 투여한 쇠고기를 먹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남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정자수가 24.3퍼센트나 적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공장식 축산업에 의해 생산되는 대부분의 미국산 쇠고기는 성장호르몬을 투여하고 있으며, 30개월령 이상 도축 소는 젖소나 씨반이 어미 소일 가능성이 큰 것이 현실이다.

GMO 기업, 인간을 대상으로 안전성 실험하려는가?

아직까지 인류의 과학기술은 GMO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판단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다국

적 거대 농축산기업과 그들을 옹호하는 미국 정부는 위험성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니 일단 상업적으로 판매를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비자단체, 환경생태운동 진영 등은 안전성이 확실히 입증될 때까지 상업적 판매를 연기하자는 입장이다. 인간을 대상으로 GMO의 안전성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유전자조작 기업들은 GMO가 인체와 환경에 무해할 뿐 아니라 인류의 기아와 농약 남용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판적 능력이 결여된 언론도 이런 주장을 맹무새처럼 되풀이해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의 벗들(Friends of Earth)’이 지난해 발표한 ‘누가 유전자 조작 작물로부터 이익을 보는가?’라는 보고서를 보면, 이런 주장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 이 보고서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결과와 미 농무부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GMO를 재배하는 면적이 늘어날수록 제초제 사용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 이유는 한 군데의 경작지에서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를 윤작하면서 같은 성분의 제초제를 계속 사용한 결과 상당수 잡초들이 이 제초제에 내성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몬산토의 경영 실적으로도 추정이 가능하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세계 최대의 유전자조작 기업 몬산토는 지난 사분기에 브라질에서 라운드업 제초제 판매와 유전자조작 옥수수·콩 판매가 크게 늘어 기록적인 판매량과 2배의 수익률을 올렸다.

몬산토사의 궤적은 유전자조작 기업의 역사 그 자체다. 프랑스의 저널리스트이자 다큐멘터리 제작자 마리-모니크 로맹은 몬산토가 어떻게 ‘독약의 군주’에서 ‘생명공학 사업가’로 변신했는가를 4년 동안 세계 곳곳을 발로 누비며 역사적으로 추적했다. 최근 국내에도 번역 소개된 《몬산토, 죽음을 생산하는 기업》(이레)을 보면, 몬산토는 1901년 인공감미료인 사카린을 제조해 코카콜라에 판매하는 것으로 출발했다. 그 후 강력한 발암물질로 추정되는 폴리염화비페닐(PCB), 다이옥신을 생성하는 고염제 등으로 많은 이윤을 남겨 ‘독약의 군주’라는 별명을 얻었다.

오늘날의 급진 사상가들 ①

네그리의 자율주의 사상은 전략의 필요성을 농친다

이 연재 기사에서는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와 급진적 사상의 부흥을 주도하는 주요 사상가들인 **안토니오 네그리**, **알랭 바디우**, **슬라보예 지젝**의 사상이 오늘날 투쟁에서 얼마나 유용한지 차례로 평가해 보려 한다.

조너선 몬더

안토니오 네그리는 마이클 하트와 함께 《제국》의 공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네그리는 1970년 대부터 이탈리아 급진 좌파들 속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네그리 사상은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 대한 독특한 견해를 바탕으로 한다.

칼 마르크스는 어떻게 노동계급이 자신의 힘을 자각하게 되고, 그래서 사회를 변혁하는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는지 살펴봤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런 일이 저절로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다.

네그리는 이런 생각을 뒤집었다. 그는 초기 저작에서 노동계급이 태생적으로 반(反)자본주의적이라고 주장했다.

네그리는 노동하면서 살아가는 유일한 계급인 노동계급이 본래 창의성과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므로 세계의 진정한 생산력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은 이 생산력에 대한 2차 반응이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노동계급의 활력과 삶을 포획하려 한다는 것이다. 네그리는 “노동계급은 주체성, 즉 발전·위기·이행·코뮤니즘을 불러일으키는 분절된 주체성”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에 네그리는 《제국》과 《다중》같은 저작에서 노동계급을 더 광범하고 모호한 개념인 “다중”으로 대체한다.

다중 개념은 우리가 “탈(脫)산업” 사회에 살고

있다는 네그리의 생각을 반영한다. 이런 사회에서는 더 창조적이고 서로 소통하는 노동 형태가 우세한데, 우리의 고유한 권력[또는 역능(力能)] 때문에 자본은 이런 노동 형태를 받아들이л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단절

그러나 이런 생각 탓에 네그리의 이론에서는 진정한 계급투쟁 개념이 사실상 사라져 버린다. 네그리는 최근 이렇게 썼다. “혁명적 단절은 이미 일어났다. 다중이 모든 것이고, 자본주의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그리 사상의 실천적 결론은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급진 세력을 건설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네그리는 “다중”의 투쟁이 자본주의 위기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견해로는 오늘날 경제 위기를 설명할 수 없다. 만약 네그리의 생각이 옳다면 오늘날 위기의 핵심부인 미국에서 자본은 수세적 태도를 취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 지배계급은 이윤을 증대시키고 노동조합을 길들이고 노동시간을 늘리는 데 성공했다.

오늘날 경제 위기를 이해하려면, 네그리가 거듭 무시해 온 자본주의의 동역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이윤을 더 많이 차지하려는 자본들 간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수평적”

경쟁과, 자본과 노동 간 “수직적” 투쟁이 상호작용한다.

네그리는 “다중”은 본래 창조적이고 자본은 이런 “다중”에 반응할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아래 노동력 착취가 지속되는 현실을 보지 못한다.

노동자가 생산물·기계·서비스를 모두 만들어 내고 자본가는 이것을 이용해 이윤을 얻지만, 무엇을 만들지 또 그것을 어떻게 만들지는 여전히 자본가의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윤을 위해 모든 것이 희생되고, 이 때문에 인간과 지구에 재앙이 닥친다.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주의 사회의 “소외”다. 즉, 직접생산자들이 노동 과정과 노동생산물을 통제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결과다.

인간 노동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세계를 만들려면, 노동계급의 대중 행동으로 기업주들의 생산수단 소유에 도전하고 궁극적으로 소유 관계 자체를 전복해야 한다. 최근에 벌어진 작업장 점거와 파업 투쟁 등은 그런 도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힌트 보여 줬다.

안타깝게도 네그리의 주장은 이런 과제 해결에 필요한 전략적 방향을 거의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전투가 이미 끝났다고 암시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번역: **이종길**

‘생명공학’으로 이미지 변신한 ‘독약의 군주’ 감시운동 벌여야

몬산토는 ‘독약의 군주’라는 불명예스러운 악명을 떨쳐 버리기 위해 1997년부터 2002년에 걸쳐 종자기업과 바이오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고, 화학분야를 매각하거나 분리했다. 그 뒤 ‘생명공학 기업’임을 자칭하며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다.

현재 몬산토는 유전자조작 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소 성장호르몬, 라운드업 레디 콩, Bt 옥수수 등을 판매하고 있다. 소 성장호르몬은 소를 더 빨리 살찌우고 엄청나게 많은 우유를 짜낼 수 있으며, 라운드업 레디 콩은 땅에 자라는 모든 식물을 죽이는 제초제(라운드업)에도 살아남는다. Bt 옥수수는 나방의 신경을 마비시켜서 죽게 만드는 바실러스 튜린젠시스(Bt) 독소를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몬산토는 독성물질인 라운드업 제초제 판매액이 전체 매출의 3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몬산토의 2006년 매출액은 73억 4천4백만 달러였으며, 그 가운데 제초제 라운드업의 매출액은 22억 달러나 됐다. 몬산토는 결코 ‘독약의 군주’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제초제 판매를 위해 생명공학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몬산토는 이미 한국에도 진출해 있다. 몬산토코리아는 2007년까지 국내 종자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다가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신흥 시장에 주력을 하는 바람에 지난해 간발의 차이로 2위로 밀려난 상태다. 2008년 국내 종자 매출액은 모두 1천8백49억 원이었다. 농우바이오는 지난해 3백57억 원(19.3퍼센트)의 매출을 올려 1위를 차지했으며, 몬산토코리아는 3백55억 원(19.2퍼센트)을 기록해 2위가 됐다.

밥상의 안전과 거대기업 감시는 결코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우리의 밥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고, 어떤 기업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대중운동을 활발하게 벌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권력과 기업권력을 감시하는 일상의 촛불을 밝혀야만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논설

이명박은 곳곳에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오바마가 미군 3만 5천여 명을 증파하는 아프가니스탄 ‘출구 전략’을 발표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이래도 패하고 저래도 패할 것”(이매뉴얼 월러스틴)인 상황에서 이것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 전략’일 뿐이다.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피로 물든 이 지옥에 따라가겠다는 대표적 줄개는 이명박 정부다. 이명박 정부가 ‘국제사회에 대한 보은’이라고 이것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황당무계한 일도 없다. 자신들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이 정부의 논리는 대개 이처럼 황당하다.

지난주에 있었던 ‘국민과의 대화’는 황당 논리의 종합판이었다. 정비된 4대강에서 로봇 물고기가 수질 감시를 한다는 설레발과 “청년 실업자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한 적이 없고 ‘맞추라’고 했다”는 오리발을 들으며 많은 사람이 욕하는 것을 느꼈다. 짜여진 각본대로 낮간지러운 질문과 뻔뻔스러운 답을 하는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보는 것은 괴로웠다. 하지만 이명박의 소감은 놀랍게도 “진솔하게 내 마음을 다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하긴 이 정부에게 수치심이란 게 있다면 그토록 맹종하던 두바이 모델의 파산에 반성을 하는 게 정상일 것이다. 물론 세종시에 대한 말 바꾸기는 “부끄럽고 죄송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그뿐이다. 말 바꾼 대로 한단다.

무엇보다 이명박이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은 ‘한상률 게이트’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추악한 뒷거래와 권력다툼 끝에 터져 나온 이 추문은 안원구의 폭로를 통해 더러운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 박사모 회장 정광용의 말대로 “안원구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하거나 탄핵”되어야 할 판이다.

이처럼 이어지는 말 바꾸기와 거짓말, 악행과 실정에 부패 스캔들까지 겹치면서 이명박은 현재 최대의 정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한번 추락을 시작한 지지율도 계속 자유낙하 중이다. 더구나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은 팍팍한 서민 경제와 가계 부채 부담에 실질급리 상승은 대중의 분노에 부채질하고 있다.

탄핵

그래도 이명박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11월 22일 ‘4대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 때 소속 단체장들이 나와 “대통령님께 경의”를 표하고 “국민으로서 자랑스럽다”고 한 민주당이 있다. 이 당이 이명박을 일관되게 반대하거나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중은 믿음을 갖지 못한다. 최근 노무현 회고록에서도 인정했듯이 “분배는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하고 … 이라크에는 파병[하고] … 정리해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당 정부였다. 따라서 그 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친노신당이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자”(유시민)며 슬그머니 ‘진보’에 발을 걸치려는 것은 역겹다.

한상률 게이트에 대한 침묵의 카르텔을 보여 주는 거대 방송과 신문사들도 이명박의 비빌 언덕이다. 전두환 정권이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청렴 정치에 앞장서 왔다”고 보도한 바 있는 김인규가 KBS 사장이 되면 이런 구조는 더 단단해질 것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는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며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폭력 탄압에 나섰다. 죄 없는 노동자들을 폭력 탄압으로 짓밟으며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려 한 것이다. 지난해 여름에도 쌍용차 노동자들이 이런 탄압의 속죄양이 된 바 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노총 지도부는 갑자기 이명박 정부와 타협으로 방향을 선회하며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투쟁을 배신으로 마무리짓고 있다. 결국 지난 한국노총 노동자대회는 15만 명을 모아놓고 거짓말을 한 회대의 사기극이었던 셈이다.

잘 싸우는 듯하던 철도노조 지도부는 갑자기 국민적 지지 여론과 조합원들의 열의있는 참여에도 파업을 중단하는 잘못된 타협을 해버렸다.

진보진영과 민주노총에게는 지금이 위기이자 기회이다. 한국노총의 배신자들에게 등을 돌리며 단호하게 원칙있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진보진영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온갖 실정과 악행에 대한 반대 투쟁을 이것과 연결시켜야 한다. 한상률 게이트에 대한 규명과 단죄를 요구해야 한다. 거침없는 폭로와 선동을 통해 켜켜이 쌓인 대중의 불만과 분노를 행동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1년(26개 호) | 5만 원
2년(52개 호) | 10만 원

www.left21.com | left21@left21.com | 02-777-2792
계좌번호(명의: 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레프트21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 철회하라

김덕엽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기획팀장

이명박 정부는 12월 8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파병 기한은 무려 2년 6개월이나 될 것이라 한다. 매년 말 불거진 파병군 철수 논란을 피해 가겠다는 심산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재파병을 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뒤 신속하게 물밑 작업을 추진해 왔다.

11월 12일 아프가니스탄 현지로 합동 실사단을 파견한 정부는 19일에는 부정선거로 당선한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하미드 카르자이 취임식에 특사를 보냈다. 특사로 다녀온 한나라당 의원 황진하는 “치안 상태를 감안해 … 충분한 규모를 보내 [야한다]” 하고 파병 확대를 요구했다.

실제 정부는 파병 규모를 애초 발표한 2백80여 명에서 4백여 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특전사로 병력을 구성하고 자이툰 부대 버금가는 무장력을 갖추겠다고 했다.

게다가 베트남 전쟁 이후 처음으로 헬기 부대를 파병하겠다고 한다. 도로 매설 폭탄(IED)을 피하려고 헬기를 이동수단으로 택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더 위험한 발상이다. 이미 헬기가 무장 저항세력의 스터머미사일과 휴대용 로켓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실제 지난 10월 26일 아프가니스탄 서부에서는 미군 헬기가 미사일 공격을 받고 추락해 장병 7명을 포함, 10명이 죽었다. 그래서 황진하와 함께 특사로 아프가니스탄을 다녀온 김무성은 “엄호를 위한 공격헬기가 없으면 위험하다” 하고 더한층 무장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현지 조사를 다녀온 정부합동

실사단은 파병 예정지인 파르완 주가 “가장 안전한 주 중 하나”라며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한다. 그러나 파르완 주가 어떤 곳인가? 2005년 5월, 미군이 전쟁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의 반미 시위가 파르완 주에서 벌어졌다. 당시 시위대 수천 명은 “미군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요구했다.

무엇보다 탈레반이 국토의 80퍼센트를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점령군에게 안전한 곳이 있을까? 군인들이 헬기로 이동하고 이를 공격헬기가 엄호하며,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채 ‘재건’이라는 딱지를 부착하면 무장 저항세력의 공격을 피해갈 수 있을까? 이런 딜레마 때문에 김무성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조용히 우리 PRT[지역재건팀]만 보호하다와야 한다. 전선이 없는 나라고 민심도 탈레반에 넘어가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불통” 정부, “불통” 국회

그런데도 한나라당 의원 송영선은 정부의 파병안이 너무 부실하다며 더 많은 군대와 철저한 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자는 그동안 눈치보지 말고 아프가니스탄에 전투병을 보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심지어 국회 동의 없이 손쉽게 한국군을 파병할 수 있게 상시파병법을 제정하자고 한다.

민주당은 눈치를 살피다 내부 논란 끝에 파병에 반대하는 당론을 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것이 강제적인 것인지 권고적인 것인지도 아직 정하지 않았다. 민주당에는 송민순 같은 적극적인 파병 찬성론자와 국력에 맞게 파병해야 한다는 ‘소신파’들이 있기 때문이다. 송영선과 함께 상시파병법을 제정하려 혈안인 송민순은 지난 11월 25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통



11월 18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한미 전쟁동맹 반대 촛불 문화제

사진 이미진

파되는 데 앞장섰다.

설사 민주당이 파병 반대를 강제적 반대 당론으로 채택하더라도 파병 찬성 의원들을 설득하고 강제하리라 장담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들은 파병 반대를 외치다 거들거들 뒤통수를

쳤다. 확고한 파병 반대 정당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아직 역부족이다.

따라서 국회가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저지할 수단이 될 수 없으리라는 점은 명백하다. “불통” 정부에 맞서 우리가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인터뷰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파병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인터뷰



“파병하는 나라는
국격을 논할
자격도 없습니다”

“미국이 현지 정권을 무력으로 무너뜨리고 현지인의 지지를 받지 못해 자력으로 생존할 수 없는 정권을 세운 나라에 군대를 보내 지원하는 것에 결단코 반대합니다. 그런 지원은 현지 국가의 재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아프가니스탄 재건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숙고해 봐야 합니다. 지금처럼 외국군이 대규모로 주둔해 있고 그들의 군사 활동 때문에 현지인들 사이에 반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그리고 이런 반감 때문에 탈레반이 전

국토의 80퍼센트를 장악하고 있고 외국군이 다시 반격하는 상황에서 재건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외국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고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합의와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바그람 기지가 있는 파르완 주를 유력한 파병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그람 기지 자체가 탈레반의 주요 공격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군 대신 우리 군이 바그람 기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런 곳에 자체 경호를 위해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파병의 진짜 이유는 미국에 대한 눈치보기가 지나쳐서입니다. 우리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앞장서 파병할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막가파식 탄압은 파병이 정당하지 못함을 내심 인정하기 때문에 그 강도가 더 세진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국민들 스스로 함께 힘을 모은다면 더는 함부로 국민들의 분노를 힘으로 누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터뷰·정리 조명훈 기자 | jomh@left21.com

오바마의 증파는 최후의 발악이다

시애틀 루딩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

오바마는 미군 3만 명 이상을 추가로 아프가니스탄에 보내기로 결정했고, 다음주에 먼저 9천 명을 보낼 것이다.

오바마가 부시의 호전적인 제국주의 정책과 선을 그을 것이라는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오바마 정부 들어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수는 두 배로 늘었다. 새로운 증파 계획이 완료되면 10만 명이 될 것이다.

백악관 대변인 로버트 김스는 최근 전쟁 비용이 거침없이 치솟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 나토는 여기서 무엇을 성취하려 하는가? 영국 총리 고든 브라운은 아프가니스탄 군과 경찰을 훈련시켜 점령군을 대신하게 하겠다고 말한다. 오바마는 증파가 아프가니스탄 정부에게 점진적으로 통제권을 넘기는 계획의 일부라고 말한다.

누구도 ‘출구 전략’이란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영국 정부와 군사령관들은 현실을 회피할 수 없다.

파병군 수가 늘어날수록 아프가니스탄의 폭력은 악화할 것이다. 침략 전쟁이 시작된 후 아프가니스탄인 수만 명이 죽었고 그보다 더 많은 이가 고향을 떠나야 했다. 또, 올해에만 미군 3백 명과 영국군 1백 명이 죽었다.

점령군은 아프가니스탄에 안정을 가져오지 못했고, 오사마 빈라덴을 추적한다는 원래한 목표는 조용히 사라졌다.

점령군이 당면한 문제는 단지 군사적 문제가 아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적 위기가 깊어지면서, 특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하미드 카르자이의 정치적 신뢰가 선거 부정 스캔들로 치명상을 입으면서 나토 정부들은 상황이 곧 안정될 것이란 거짓말을 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지금 오바마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고위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이 ‘대표단’의 목표는 카르자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대한 미국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 오바마와 브라운은 아프가니스탄 재건 자금을 부패한 카르자이의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 정부에 직접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에게는 설상가상으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토 국가들이 추가 파병을 약속하길 꺼리고 있고, 캐나다 등 몇몇 나라들은 철군 계획을 추진 중이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밀어붙이면서 철저히 고립돼 있다. 오바마의 새로운 증파 결정은 절망적 상황에서 나온 최후의 발악에 불과하다.

번역 김용욱 기자